당원용

일자리 먼저,
서민 먼저

한나라당은 경제회복의 불씨가
경제도약의 큰 불꽃이 되고,
서민생활 곳곳에서
웃음의 꽃이 피어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달릴 것입니다.
책임과 차별화된 국정 능력으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한나라당이
해내겠습니다.



일자리 활짝!
서민물가 활짝!

smart 한나라당

일자리 활짝!
서민물가 활짝!

제5회 동시지방선거 한나라당 정책공약집

발 행 인 | 한나라당
펴 낸 이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홈페이지 | www.hannara.or.kr

디자인 제작
가온미디어(주)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91-20번지
TEL | (02) 543-3041

일자리 활짝! 서민살림 활짝!

제5회 동시지방선거 한나라당 정책공약집

smart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새로운 3년을 시작합니다

“처음의 마음으로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이 주신 사명으로 쉬지 않고 달려온 2년, 한나라당은 “경제를 살려라” “미래를 열어라”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보여주신 바람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5회 동시지방선거 한나라당 정책공약집『일자리 활짝! 서민 얼굴 활짝!』은 그 처음의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민들께 한나라당이 약속하고, 다짐했던 ‘일류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라는 고민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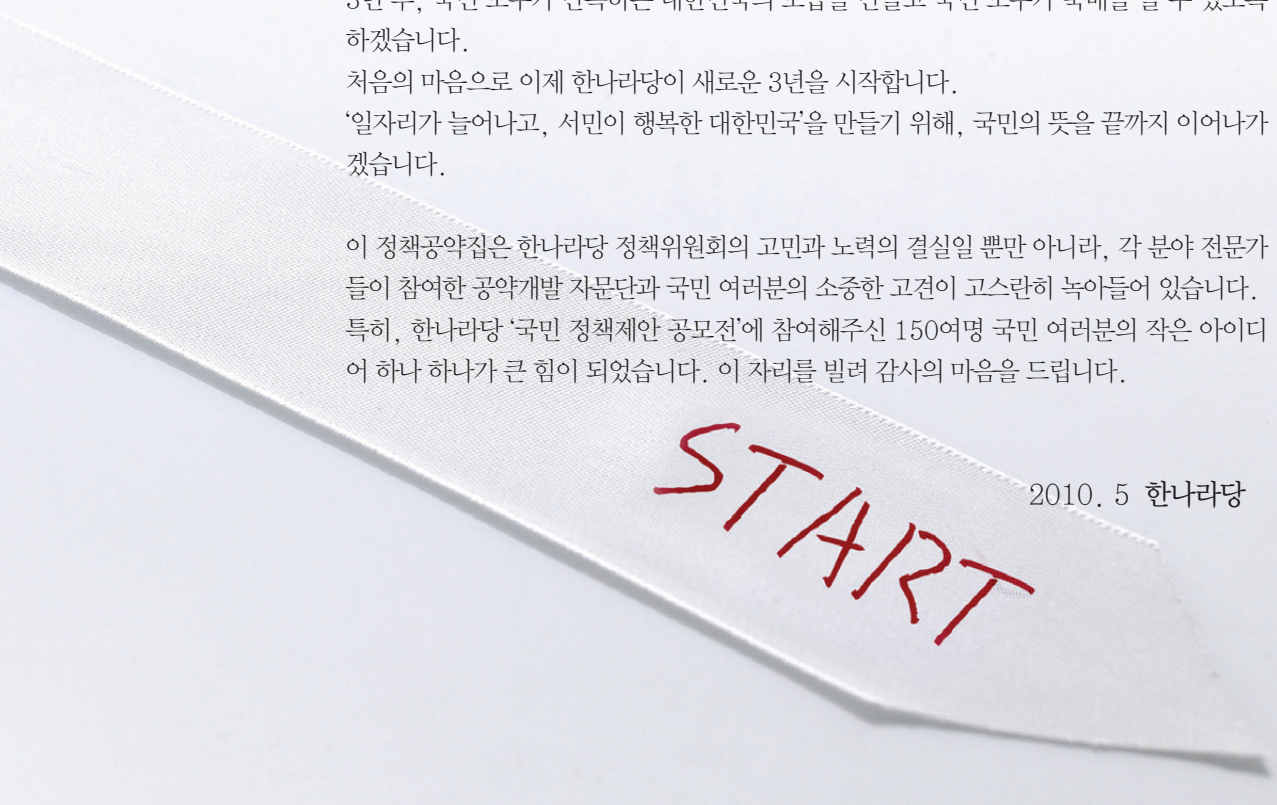
“지킬 수 있는 약속, 실천을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책임과 실천으로 보답하는 한나라당이 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의 정책공약집은 ‘매니페스토 정신’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공약 하나하나에 대해 몇날 며칠 마라톤회의를 통해 소요 재원과 이행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오로지 표만을 의식하여 앞뒤 보지 않는 선심성 공약과는 차별화 하여, 작더라도 반드시 실천 할 수 있는 약속을 담았습니다.

“이제 한나라당이 새로운 3년을 시작합니다”

한나라당은 아직 지난 17대 대선 승리의 축배를 들지 않았습니다.
3년 후,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고 국민 모두가 축배를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의 마음으로 이제 한나라당이 새로운 3년을 시작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뜻을 끝까지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정책공약집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 고민과 노력의 결실일 뿐만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약개발 자문단과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국민 정책제안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150여명 국민 여러분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 하나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010. 5 **한나라당**

한나라당의 10대 약속

1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 공공부문에 30만개 일자리 창출
- 지자체장 일자리 공시제도
- 청년 인턴제 확대 및 글로벌 청년리더 육성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설치 확대
- 노인일자리 18만 6천개 제공 및 고용 연장
- 사회 서비스 일자리 · 사회적 기업 육성

2 아이 키우기 편한 나라

- 서민 · 중산층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 유치원 이용료 전액 지원
-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50만원으로 확대
- 남편 출산휴가 유급 5일로 확대
- 영유아 A형 간염 무료접종 실시
- 직장 보육시설 설치 확대 및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다자녀가구 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차량 취 · 등록세 면제, 세대주 정년연장 우대 등 3대 인센티브 제공

3 서민 • 중산층 생활비 줄이기

- 근로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 통신요금 20%인하
- 보금자리 주택 2012년까지 74만호 공급
- 저소득층 학생 20만명 EBS 수능교재 무료 제공

4 내 집 같이 좋은 학교

- 교과교실제 · 교과중점학교 도입, 학교운영비 지원 확대
- 학습연구년제, 수석교사제 도입으로 잘 가르치는 교사 우대
- 2015년까지 학교 화장실, 냉 · 난방 시설 개선 100% 달성
- 교내 후미진 곳 CCTV 설치 확대 · 학교폭력 상담서비스 확대

5
365일 든든한 급식

- 저소득층, 농어촌 초 · 중 · 고등학생 전원 무료급식 실시
- 학교에 가지 않는 방학과 토 · 일요일, 공휴일 중에도 급식 지원
- 사회복지통합전산망 통합관리로 지원 대상자 노출 최소화

6
힘내라! 중소기업

- 세계적 전문중견기업과 글로벌 강소 중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설치
- 대기업 부당 납품단가 개선
- 해외진출 U턴기업 세제 지원

7
소외와 차별 없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

- 기초수급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 기초수급자를 벗어나도록 한시적 의료급여 지원
- 장애인 연금제,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 도입
- 장애인 공직진출기회 확대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
-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추진
- 시니어클럽 운영 활성화
- 다문화가족 사회 적응 훈련 등 맞춤형 지원

8
골목골목 안전한 우리 동네

- 아동 성폭력 범죄자 처벌 강화
- 성폭력 범죄자 유전자 정보 DB화, 인터넷 열람
- 등하교 안전서비스,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확대
- 학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설치 확대
- 치안센터 24시간 상주근무자 배치

9
골고루 잘 사는 내 고장

- '향토발전세' 도입
- 163개 기초생활권 · 5+2 광역경제권 · '4+α' 초광역개발권 등 지역발전 계획의 구체화
- 157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 · 기업도시 추진
- 지방정부 청사 면적 기준 법제화, 건축비 · 에너지 경비 등 공시 추진
- 지방공기업 구조 조정 및 공사채 발행 규제 강화

10
경쟁력 있는 농어촌

- 쌀 값 안정을 위해 쌀 20만톤 매입
- 벼 재배면적에 콩 · 옥수수 등 재배할 경우 1ha당 300만원 지급
- 65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지급
- 농어촌 주민 공동경영 회사 설립 지원
- 농어촌 노인에게 공동 숙식을 제공하는 '실버 홈' 조성과 전원마을 300개소로 확대
- 농어촌 지역 119 구급센터 확대
- 농어촌 30만호 석면슬레이트 지붕 안전하게 교체

Contents

일자리 활짝! 서민물가 활짝!

제5회 동시지방선거 **한나라당 정책공약집**



발간사 ---- 04

한나라당의 10대 약속 ---- 06

서문 ---- 14

일자리 만들기

일자리 만들기, 정부부터 나서겠습니다 ---- 020

금년 중 공공부문에서 30만 일자리 창출 / 일자리 DB 활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취업 알선 / 문화 관광 일자리 1만개 창출

지역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 021

지자체장 일자리 공시제도 실시 / 지역 공동체 일자리 3만개 조성

일하는 여성이 늘어납니다 ---- 022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2012년까지 1백개로 확대 / 주부 대상 파트타임 일자리 임금의 50%를 지원 / 파트타임제와 유연근로제를 정착하여 여성 근로환경 개선 /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적극 지원

청년의 꿈이 일터에서 피어납니다 ---- 023

경제정책의 추진을 고용 창출력 제고에 초점 / 대기업과 사회적 협약 체결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저탄소 녹색성장 전문 기술 인력 1만명 양성 / 글로벌 청년리더 육성 / 첨단 미래 산업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3년간 4200억 원 투자 / 권역별 선도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 청년 – 중소기업간 구직 네트워크 구축 /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활성화 /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 관광벤처기업 지원 및 육성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 025

임금피크제를 적극 활용, 고용연장 / 노인 일자리 확대 / 사회서비스 일자리 13만개 창출 / 사회적 기업 1천개 설립 / 개인 특성에 맞는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베이비 붐 세대 고용대책 관련 사회적 논의 본격적으로 추진



서민이 행복한 나라

교육비 부담 낮춰, 가계 주름 펴드리겠습니다 ---- 028

사교육비 부담 실질적 경감 / 저소득층 학생 20만 명에게 EBS교육방송 수능교재 무료 제공 /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 / 대학 기숙사 보급률 확대

서민 주택공급으로 '내집마련의 꿈' 이뤄드리겠습니다 ---- 030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 74만호 공급 /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 도시형 생활주택 매년 2만호 공급

서민 실생활비를 줄여 드리겠습니다 ---- 031

근로자 대중교통비용 소득공제 / 통신비 부담 20% 완화 / LPG 판매가격 공개 / 자동차 세금부담 경감

서민 경제를 회복시키겠습니다 ---- 032

미소금융지점 전국에 2~3백개 지점 개설 / 저신용 서민에게 생활자금 5년간 10조원 지원 / 대부업체 최고금리 10% 인하 / 무주택서민 임대차 우선변제금, 3억원 수준으로 인상 /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사범 근절

서민의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034

성실 상환자에게 연 4% 금리의 생활자금 대출 확대 / 단기연체자를 위한 사전채무재조정제도 지속 운영

카툰으로 읽는 정책 이야기 〈근로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 035



아이 키우기 편한 나라

걱정 없이 아이 키우는 '행복한 나라' ---- 038

서민 중산층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 유치원 이용료 전액 지원 / 남성무급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전환 /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50만원으로 확대 / 영유아에 대한 A형 간염 무료접종 실시 /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서비스 향상 / 다자녀 가구 인센티브 제공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 끌어올리겠습니다 ---- 040

교과교실제 전국 확대 / 교과중점학교제 확대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확대 등 국가 의무교육 강화 / 전문계고 선도모델로 마이스터고 육성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강화

우리 아이들을 위한 365일 든든한 급식 ---- 042

저소득층과 농어촌 초 · 중 · 고등학생 무료급식 확대

카툰으로 읽는 정책 이야기 〈영유아 A형 간염 무료 접종 실시〉 ---- 043

내 집 같이 좋은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044

내 집 같이 좋은 학교 환경 만들기 / 단위학교 생활지도 책임제 시행 / 학교의 후미진 곳까지 CCTV 설치 / 초등생 등하교까지 확실히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사업 확대 / 피해 · 가해 학생에 대한 맞춤형 상담서비스 Wee클래스 확대 / 학교폭력 엄격 대응 / 청소년 역량개발 · 성장 지원 프로젝트 추진

'선생님, 힘내세요' ---- 046

쾌적한 연구 · 지도 환경 조성과 교원 업무 경감 / 학습연구년제 도입 / 수석교사제 도입 / 학교현장의 참스승, 으뜸교사 발굴



더불어 잘사는 사회

빈곤의 악순환, 끊겠습니다 ---- 050

기초수급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소외계층 교육복지 대폭 확대 / 기초수급자를 벗어나도록 한시적 의료급여 지원 / 저소득층 거주 지역 300개소 주거환경 개선 / 에너지 복지법제정 및 에너지 바우처 도입 /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기기 설치 지원

함께하는 사회, 장애인 먼저! ---- 052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과 지원 확대 /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양육 지원 /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 장애인 고용 획기적 증대 / 중증장애인 공직기회 확대 /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확대 / 장애인 교육복지 확대 / 장애인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 / 저상버스도입 확대 / 수화기본법 제정 등 장애인 삶의 질 개선

카툰으로 읽는 정책 이야기 〈저소득층 거주지역 300개소 주거환경 개선〉 ---- 055

노후, 실버가 아닌 골드입니다 ---- 056

노인일자리 확대 /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추진 / 노인단체 법정화 및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 / 시니어클럽 운영 활성화

다문화가족은 글로벌 시대의 뉴패밀리 ---- 058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및 내실화 /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 이주여성 인권보호 / 결혼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선 /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나라 법·문화 교육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미래 국제지도자 육성

힘내라!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062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6대 제조기반기술 선진화 /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TV채널 설치

경영자도 취업자도 신바람 나는 중소기업 ---- 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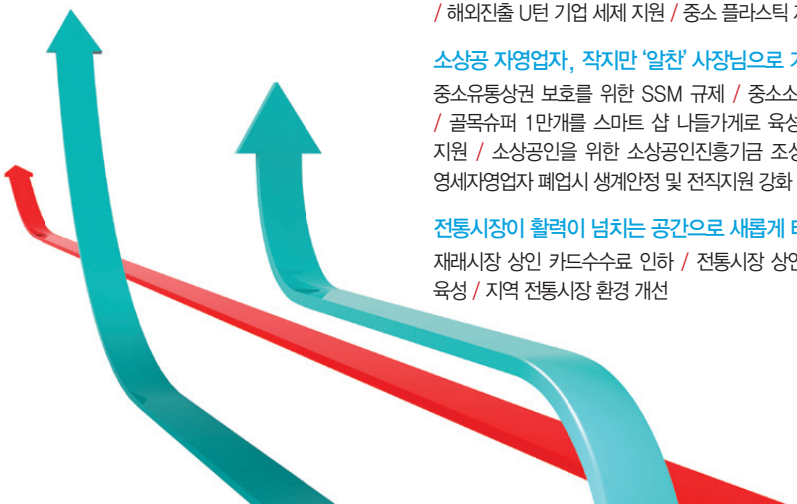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기간제 근로자 고용 개선 / 대기업 부당 납품단가 개선 / 지자체와 해외진출 기업의 국제투자 분쟁 예방 및 해결 지원 / 민법 개정을 통한 법인 소멸시효 제도 선진화 / 해외진출 U턴 기업 세제 지원 /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폐기물부담금 50%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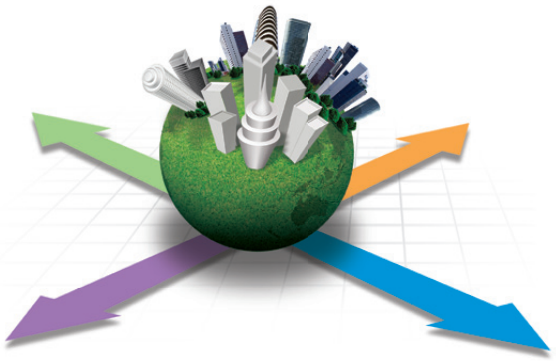
소상공 자영업자, 작지만 '알찬' 사장님으로 거듭납니다 ---- 066

중소유통상권 보호를 위한 SSM 규제 / 중소소매업 공동구매를 위한 5개 광역 물류센터 설치 / 골목슈퍼 1만개를 스마트 샵 나들가게로 육성 / 침체상권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원 /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진흥기금 조성 / 서민계층에 대한 보증부 대출 공급 확대 / 영세자영업자 폐업시 생계안정 및 전직지원 강화

전통시장이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 068

재래시장 상인 카드수수료 인하 / 전통시장 상인 무담보 저리대출 확대 /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 지역 전통시장 환경 개선





골고루 잘 사는 내 고장

지역의 경쟁력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 072
초광역권 개발계획의 추진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 신발전지역 지정 · 지원 / 지역별 맞춤형 개발프로젝트 추진 / 지역 산업기반의 재생 및 확충 / 새만금지역 사업의 본격 착수 / 해외진출기업 국내이전 세제 지원

지방의 발전 잠재력, 확실히 끌어올리겠습니다 – 074
향토발전세 도입 / 지방과학기술 역량 강화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 · 기업도시 추진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추진 / 도서 · 해안지역 맞춤형 개발 추진 / 지방공기업 구조 조정 및 공사채 발행 규제 강화 /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발전동력 확보 /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기한 연장 /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지역환경 개선으로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 076
4대강살리기와 하천관리 선진화 추진 /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편 추진 / 군사시설 주변지역 관련 규제 완화 / 지역의 노후 버스터미널 현대화

지역의 일은 지역이! 지방자치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 078
지방으로 권한 대폭 이양 /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으로 지방재정 확충 / 지방소득세의 탄력적 운영 / 호화청사 · 낭비성 축제 방지 / 지방재정 건전화

경쟁력 있는 농어촌

농림수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082
쌀 제 값 받기 / 친환경농업 적극 추진 / 한국 농어업을 이끌 식품산업 육성 / 농수산물 팔아주는 농 · 수협으로 조기 개편 / 수산자원 관리로 어민 소득기반 마련 / 산림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 콩과 사료용 작물의 자급률 확대 / 농가부채문제 해결에 집중 지원

농어민이 활기찬 공간으로 바뀝니다 – 084
농어촌 주민이 공동 경영하는 회사 설립 지원 / 공동으로 숙식하는 농어촌 '실버 홈' 조성 지원 / 전원마을을 2013년까지 300개소로 확대 / 농어촌 · 도서지역 물 문제 해결 /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피해 보상 확대 / 농어촌 30만호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안전하게 교체

농어민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 086
2011년부터 농지연금사업 실시 / 농작업 재해로부터 안전보장 / 농어촌 어디서나 30분 이내 응급처치 가능 / 여성 농업인센터를 군마다 1개소 설립 지원 / 농어촌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안전한 사회

우리 아이 '안전' 책임지겠습니다 ---------- 090
아동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 등교부터 하교까지 안전서비스 실시 /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 성폭력 범죄자 유전자 정보 DB화 추진

카툰으로 읽는 정책 이야기 〈아동범죄 없는 사회〉 ---------- 091

빈틈 없이 지켜드리겠습니다 ---------- 092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설치 / 민생침해사범 근절 / 치안센터 24시간 상주근무자 배치 / 기업형 조직폭력 엄단

재해 · 재난 NO, 이제 안심하세요 ! ---------- 094
재해예방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재난신고전화를 119로 일원화 / 소방공무원 3교대 실시 / 위험시설 및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보험가입 의무화 / 취약계층 전기 · 가스시설 무료 안전진단 / 농어촌 119 구급지원센터 설치

클린 코리아를 국민의 손에 ---------- 096
어린이 환경안전 가이드라인 제정 / 석면피해 구제 / 위해식품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 / 농축산물 안심 소비 확대 / 수돗물 품질 개선 / 폐광지역 오염 방지



미래 준비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그린 브랜드가 됩니다 ---------- 100
저탄소 녹색성장 경제의 기틀 마련 / 신재생 에너지산업 본격 육성 / 버려지는 폐자원을 청정에너지로 전환 / 저탄소 녹색성장 전문 인력 양성

도시가 살아 숨쉬는 푸른 국토를 만듭니다 ---------- 102
저탄소 녹색 도시공간 조성 / 도시내 자투리 공간을 생태공간으로 조성 / 수자원 · 해양분야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친환경 생태관광 인프라 조성

그린 라이프 다함께 만들어가요 ---------- 104
친환경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 누구나 편리한 녹색 교통체계 구축 / 자전거 거점도시 10개 육성 및 자전거 도로 확충 / 자동차세 연비기준 개선 및 전기자동차 세제 지원 / 자동차 그린패스제도 도입 / 백화점 등 재사용종량제봉투 전면 사용

대한민국호에 새로운 엔진을 ! ---------- 106
신성장동력의 가시적 성과 도출 / 민간투자 활성화와 시장형성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 신흥자원부국에 대한 시장 개척 강화 / 해운 · 물류산업 환경 개선

세계 최강 과학기술 강국 코리아 ---------- 108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 확대로 국가경쟁력 기반 강화 / 우주기술 10대 강국 건설 / 원자력 3대 강국 건설 / 과학기술인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대한민국의 희망, 미래인재 양성 ---------- 110
세계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 재외 한국학교 선진화 / 국제기구 진출 지원 / 도덕이 경쟁력, 선비문화 생활화



국가품격 향상

글로벌리더 코리아 ! ---------- 114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

카툰으로 읽는 정책 이야기 〈글로벌 리더 코리아〉 ---------- 115

내집 같은 병영, 행복한 군인 ---------- 116

병영환경 개선 및 군 복지 증진 / 군 복무 중 학점 인정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면제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주택청약시 가점부여 / 군 복무 중 희생군인에 대한 보상 및 예우 격상

법과 질서가 살아있는 나라 ---------- 118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일관된 법 집행 / 법 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추진

부정 부패가 발 붙이지 못하는 사회 ---------- 119

공공부문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 지역 토착비리 척결 및 범죄수익 철저 환수

'우먼 업 코리아' ---------- 120

국제성평등 지수 향상 / 여성분야 국제협력 강화 / 공공분야 여성대표성 확대 및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 발굴 / 가족이 함께하는 남녀평등한 생활문화 확산 / 양육과 가사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시스템 마련 / 폭력과 범죄 없는 도시 만들기 / 여성이 안심하는 주거환경 만들기 / 여성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시환경 만들기

가정의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 122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 /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 취약한 가정의 지원 강화 / 소외계층의 여성 인권 보호





살아나는 경제,
불씨를 키울 때입니다

온 국민과 함께 달려온 지난 2년

작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선진국들의 경제도 큰 폭으로 뒷걸음질 친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우리 경제도 그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고 실물경기가 위축되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진 만큼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려움을 헤치고 OECD 국가 30개국 중 플러스 성장을 한 세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무디스가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을 12년 만에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금년 들어 일자리 증가폭이 확대되고, 가계의 실질소득이 작년 4/4분기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우리 경제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한데 뭉쳐, 고통을 분담하고, 더 큰 미래를 위해 나아간 결과,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세계의 유수 언론과 국제기구 · 정부관계자들은 한국의 성공적 위기극복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고, 한국 정부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정책 추진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G-20 정상회의, 2012년에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리더 코리아의 면모를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 국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경제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울 때

그러나 아직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버젓한 일자리를 구하여 미래의 희망을 키워나가고 서민들의 생활이 활짝 피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또한,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요인이 남아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약해져 가던 경제의 불씨를 살려낸데 만족하지 않고, 이 불씨를 더욱 키워야 하는 때입니다.
경제 회복의 불씨가 더욱 커져 우리 주변의 일자리와 투자로 연결되어 서민 생활 구석구석까지 활기를 띨 수 있도록 나라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발목 잡는 정치, 생떼 쓰는 정치, 갈등의 정치로 살아나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불씨를 더욱 크게 키울 때입니다.
한나라당이 국민과 함께 경제 회복의 불씨를 키우고, 모두가 도약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자리 먼저! 서민 먼저!

일자리 먼저 챙기겠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지역에서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정해,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에게 일자리 정책을 의무화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후보자들이 각 지역의 일꾼이 되어 일자리를 만드는데 발 벗고 나설 것입니다.
여성 · 청년 · 노인 등 계층별로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문화 · 관광 분야 등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기업은 일꾼을, 구직자는 일자리를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구인 · 구직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서민부터 챙기겠습니다.

서민 생활에서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곳부터 찾아 어깨의 짐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약을 통해 교육비 · 주택구입비 · 실생활비 등 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EBS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고, 보금자리주택과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대중교통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시행하고, 저신용 서민에게는 5년간 10조원을 들여 생활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말만 서민정당이 아니라, 계획부터 실천까지 서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한나라당이 될 것입니다.

지역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방방곡곡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부강해집니다. 한나라당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2012년까지 10개 혁신도시에 157개의 공공기관의 이전을 마쳐 지역 발전의 잠재력을 확실히 끌어올리겠습니다. 향토발전세를 도입하여 지방의 재정을 늘리고, 낭비되는 지역 예산이 없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감시할 것입니다.
농촌도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 있는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농민 경제의 근원인 쌀이 제 값을 받도록 하고, 농가 부채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 곳곳이 활기차게 돌아가도록 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국민의 큰 뜻, 한나라당이 실천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경제회복의 불씨가 경제 도약의 큰 불꽃이 되고, 서민 생활 곳곳에서
웃음의 꽃이 피어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달릴 것입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의 큰 뜻을 모아 한나라당이 실천하겠습니다.
책임과 차별화된 국정 능력으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국민과 함께 한나라당이 해내겠습니다.



일자리 만들기



경기회복에 따라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고용사정은 아직 어려운 형편입니다. 서민층은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서민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만들기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도 일자리가 충분히 늘어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내 '일'이 있어 '내일'이 있는 나라

일자리 만들기, 정부부터 나서겠습니다

- 금년 중 공공부문에서 30만 일자리 창출
- 일자리 DB 활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취업 알선
- 문화 관광 일자리 1만개 창출

지역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 지자체장 일자리 공시제도 실시
- 지역 공동체 일자리 3만개 조성

일하는 여성이 늘어납니다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2012년까지 1백개로 확대
- 주부 대상 파트타임 일자리 임금의 50%를 지원
- 파트타임제와 유연근로제를 정착하여 여성 근로환경 개선
-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적극 지원

청년의 꿈이 일터에서 피어납니다

- 경제정책의 추진을 고용 창출력 제고에 초점
- 대기업과 사회적 협약 체결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저탄소 녹색성장 전문 기술 인력 1만명 양성
- 글로벌 청년리더 육성
- 첨단 미래 산업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3년간 4200억 원 투자
- 권역별 선도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 청년 – 중소기업간 구직 네트워크 구축
-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활성화
-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 관광벤처기업 지원 및 육성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 임금피크제를 적극 활용, 고용연장
- 노인 일자리 확대
- 사회서비스 일자리 13만개 창출
- 사회적 기업 1천개 설립
- 개인 특성에 맞는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베이비 붐 세대 고용대책 관련 사회적 논의 본격적으로 추진

일자리 만들기, 정부부터 나서겠습니다

정부부터 나서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한편,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우선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통해 고용 지원을 계속하고, 아이 돌보미 · 방과 후 학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취업 인프라 구축도 절실합니다.

금년 중 공공부문에서 30만 일자리 창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지속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연 3만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아이 · 노인 돌보미, 방과 후 학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통해 13만 명이 추가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층의 구직기간 장기화에 따른 취업포기를 방지하고, 현장 훈련을 통해 취업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 인턴제 2만명을 지원하고, 고졸이하 미취업자를 인력수요가 큰 전문 기능인력으로 양성하는 전문 인턴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층에도 연 11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일자리 DB 활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취업 알선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구직 DB와 중소기업 빈 일자리 DB를 확충하여 상호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당장의 취업희망자에게는 고용지원센터와 민간 고용 중개기관을 통해 일자리를 알선하고, 교육훈련 희망자에게는 훈련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연1%로 5년간 대부하여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창업희망자에게는 펀드를 3조 5천억 원 조성하여 창업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빈일자리 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본인에게 취업장려수당을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장기실업자가 DB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월 100만원 수준을 3년간 소득공제하며,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증가 인원당 300만원을 세액 공제하겠습니다.

문화 관광 일자리 1만개 창출

생활체육 지도자 육성, 소외계층 예술교육강사 지원, 박물관 · 도서관 등의 개관시간 연장운영 등을 위해 매년 1천억 원을 지원하여 1만명이 추가로 고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지방정부도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매달려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자체별로 구인 및 구직 관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계하여 일자리 구하기가 쉬워져야 합니다.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경상경비 · 행사비 등을 줄여 지역 공동체 일자리를 만드는 자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장 일자리 공시제도 실시

지자체장 후보 공천시 일자리 목표를 공약하고, 임기 중에는 일자리 목표와 추진 실적을 공시하여 지자체장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일자리 수, 취업현황 등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동부 워크넷과 연결하여 취업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자들은 모두 일자리 공약을 냈고, 이 후보자들이 지역의 일꾼이 되어 일자리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설 것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3만개 조성

지자체의 경상경비 · 행사비 등 5% 절감분 3천억 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를 조성하고, 지자체의 고용확대 노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공개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금 배분을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여성이 늘어납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여성인력 활용이 국가경제발전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5%수준으로 덴마크 77%, 미국 69%, 프랑스 65%, 일본 62% 등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여성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 공기업은 물론 기업의 여성 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고, 여성친화적인 직종에 대한 능력개발 훈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2012년까지 1백개로 확대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에서 결혼, 출산 등으로 전업주부가 된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70여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2012년까지 100개로 늘려 여성고용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 대상 파트타임 일자리 임금의 50%를 지원

공공기관 민원상담, 박물관, 도서관 등 시간제 근로 취업 시 40만원 범위내에서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하여 전업 주부의 일자리를 늘려가겠습니다. 특히, 주부들이 선호하고 있는 보육 교사 자격증을 실업자 직업훈련에 포함시켜 직장보육시설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파트타임제와 유연근로제를 정착하여 여성 근로환경 개선

공공부문부터 파트 타임제 도입 등으로 유연근무 환경을 확산하고, 탄력적 근로 시간제 모형을 개발하여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적극 지원

여성 친화적인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여 정부 지원 일자리에 대한 여성 참여율을 제고하며, 여성 유망 신산업 중심의 창업 훈련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청년의 꿈이 일터에서 피어납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20대 태반이 백수란 뜻의 이태백이란 말이 유행어가 될 만큼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이 늘어나면 사회 전반에 젊은피를 수혈해 생기를 불어넣고 경제 활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정책의 초점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대기업과의 사회적 협약, 중소기업 일자리와 청년 구직자간 연계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녹색산업, 첨단산업 등 성장성 높은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직업훈련도 내실화 해야 합니다.



경제정책의 추진을 고용 창출력 제고에 초점

산업정책 및 재정 · 세제 등 제반 경제정책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용창출력이 높은 미디어 · 콘텐츠 · 3D 산업 등 서비스 산업이 선진화 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확대와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업과 사회적 협약 체결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

매출액 상위기업 일수록 청년 신규고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바, 대기업과 사회적 협약을 추진하여 기업의 신규채용 인원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전문 기술 인력 1만명 양성

녹색산업의 성장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녹색기술 · 산업에 대한 전문 기술 인력 1만 명을 양성하기 위해 금년부터 2013년까지 6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글로벌 청년리더 육성

청년들의 해외 교류확대와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해 금년 중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워킹할러데이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개도국의 교육, 보건의료, 농촌개발 분야 지원과 해외취업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 해외봉사단 2만 명을 파견하겠습니다.

첨단 미래 산업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3년간 4,200억 원 투자

반도체, IT기기 등 기존 주력사업에서 첨단융합, 녹색산업, 고부가 서비스 등 미래 산업을 주도할 인력을 양성하여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폴리텍 대학에 신재생에너지 · 그린수송 등 녹색 산업분야의 학과 신설, 고학력 미취업자 특별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고학력 실업해소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정부예산 4,2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권역별 선도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전국 7개 권역별 대학에 지정된 20개 인재양성센터에 2013년까지 5천억 원을 지원하여 기술개발 후 투자단계에 필요한 인력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 중소기업간 구직 네트워크 구축

청년 · 중소기업간 DB인 Job-young Work-net을 구축하여 매년 20만명에 달하는 중소기업 부족인력과 청년 취업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교육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활성화

청년구직자에게 미리 중소기업 근무기회를 주어 중소기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의 자금지원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창업 인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중 500명을 선발하여 향후 창업을 통한 일자리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벤처기업 지원 및 육성

관광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여 5인 수준의 관광벤처회사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관광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지원 대상에 관광분야가 포함되도록 하고, 필요한 첨단 관광정보 및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앞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 1955년~1963년생 710만명의 고용조정이 예상 됩니다. 한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어르신들의 실직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적극 활용, 고용연장

인력수급상황이나 직종 등 기업여건을 감안해 고용기간 연장이 가능한 임금 피크제 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촉진 보전수당제도를 베이비 붐 세대 고용연장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편하고, 보전수당을 2012년까지 320억 원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금년에 노인 일자리 연 11만개를 제공할 계획이며, 노인 일자리를 매년 단계적으로 늘려 2014년까지 연 30만개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월평균 근로시간 45시간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노인이 받는 보수 수준도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연 13만개 창출 / 사회적 기업 1천개 설립

아이 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장애아 교육지원 등 정부 각 부처에서 필요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연 13만개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농촌체험, 생태마을, 지방관광지 스토리 텔러 등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특화사업에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사회적 기업 1000개소를 설립하여 5만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개인 특성에 맞는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중앙회를 중견인력의 취업지원 창구로 육성하여, 대기업을 그만 둔 인력을 중소기업에 연결하겠습니다. 저학력의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국 16개의 고령자 인재은행을 통해 '훈련-고용-취업지원 프로그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실직 고령자에게는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일자리 제공으로 연계되는 취업 패키지를 지원하겠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 고용대책 관련 사회적 논의 본격적으로 추진

지난 3월에 구성된 노사정위「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활동을 활성화 하여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랑의
행복한 나라



어깨의 짐,
덜어드리겠습니다

교육비 부담 낮춰, 가계 주름 펴드리겠습니다

- 사교육비 부담 실질적 경감
- 저소득층 학생 20만 명에게 EBS교육방송 수능교재 무료 제공
-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
- 대학 기숙사 보급률 확대

서민 주택공급으로 '내집마련의 꿈' 이뤄드리겠습니다

-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 74만호 공급
-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 도시형 생활주택 매년 2만호 공급

서민 실생활비를 줄여 드리겠습니다

- 근로자 대중교통비용 소득공제
- 통신비 부담 20% 완화
- LPG 판매가격 공개
- 자동차 세금부담 경감

서민 경제를 회복시키겠습니다

- 미소금융지점 전국에 2~3백개 지점 개설
- 저신용 서민에게 생활자금 5년간 10조원 지원
- 대부업체 최고금리 10% 인하
- 무주택서민 임대차 우선변제금, 3억원 수준으로 인상
-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사범 근절

서민의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성실 상환자에게 연 4% 금리의 생활자금 대출 확대
- 단기연체자를 위한 사전채무재조정제도 지속 운영

교육비 부담 낮춰, 가계 주름 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교육비 · 등록금 · 생활비 등을 포함한 교육비 부담이 OECD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높은 교육비 부담으로 가계가 휘청거리고 계층 간 교육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탄탄한 교육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적성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교육비 부담 실질적 경감

사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 분석을 실시하여 원인에 따라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지역교육청 자체 단속 등을 통해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20만 명에게 EBS교육방송 수능교재 무료 제공

교육의 기회가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학생 20만 명에게 EBS수능교재 50만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스타강사 영입과 우수교사 파견제 등을 통해서 EBS에 우수강사를 확보하겠습니다. 수준별 맞춤형 강좌를 편성하여 방송의 질을 높이고, 입시정보 제공 등 EBS 교육방송의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

대학 등록금 상한제와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나가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대학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기숙사 보급률 확대

국립대학은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 활용하여 기숙사 보급률을 2012년에 22%까지 올려 농 · 어촌학생들이 원한다면 모두 대학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립대학은 부분임대 아파트, 초소형 원룸형 아파트, 에듀-하우스 공급을 확대하고, 대학생을 위한 전세보증금 융자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 주택공급으로 '내집마련의 꿈' 이뤄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2008년 기준 110%로 많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주택 수요가 몰려 있는 서울, 수도권, 일부 광역시의 보급률은 아직 100%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주택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높은 집값은 내집마련의 희망을 멀어지게 하고, 서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은 돈으로 누구나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주택마련 정책이 절실합니다. 국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렴한 주택을 도심 인근에 많이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 74만호 공급

2012년까지 수도권 60만호를 포함, 전국에 보금자리주택 74만호를 공급하고,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도 2012년까지 32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청약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영구임대, 매입임대, 분납형 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 등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손잡이, 좌식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매년 2만호 공급

직장근처 도심 · 역세권 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금년 중 2만호 공급하겠습니다. 공급유형을 단지형 연립주택에까지 확대하고,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을 통해 소형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인 가구 · 고령화 등 주택수요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서민 실생활비를 줄여 드리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실생활비 부담으로 서민의 주머니 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교통비 · 통신비 등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비를 비롯해 대다수의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의 합리적인 기본요금 인하,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서민 생활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 대중교통비용 소득공제

근로소득 금액 상위 30%를 제외한 연 3천만원이하 소득 근로자에 대해 연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해당 근로자가 지불한 대중 교통비용을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통신비 부담 20% 완화

합리적인 기본요금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초당 과금제를 확산하며 전기통신사업 도매제공 의무화제도 시행을 통해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는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이 20%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이 일반 휴대폰에서 받는 감면액과 동일한 수준의 감면 혜택을 스마트폰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모바일 혁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LPG 판매가격 공개

내년 하반기부터 LPG 충전사업자 및 LPG 판매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매가격을 공개하여, 서비스 경쟁을 통해 LPG 가격이 인하되도록 하고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세금부담 경감

택시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시한을 연장하여 택시 운영비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발전에 따라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경제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최근 경제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이 낮은 서민이 목돈이 필요할 때 쉽게 이용할 금융회사가 없어 고리의 대부업체나 사금융을 이용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민이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비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의 활성화가 절실합니다. 또한, 불법 사금융 · 채권추심행위, 보이스 피싱 등 서민을 상대로 하는 경제사범 단속을 강화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적 안전망 구축도 필요합니다.

미소금융지점 전국에 2~3백개 지점 개설

자활의지가 강한 저소득 · 저신용층에게 무담보 · 무보증의 창업자금을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미소금융 재원을 10년간 2조원 이상 마련, 전국적으로 200~300개 지점을 개설하여 서민들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신용 서민에게 생활자금 5년간 10조원 지원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서민이 생활자금 등 목돈이 필요할 때, 대부업체 등의 30~40%대의 고금리 대출 대신 이용할 수 있는 10%대의 보증부 대출을 신설하여 금리부담이 낮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부 대출은 금년 하반기부터 매년 2조원씩 5년간 지원하여 약 2백만 명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체 최고금리 10% 인하

현재 49%인 대부업체 등의 대출 최고금리를 39%로 인하하여 서민 금리부담이 낮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을 고쳐 금년 상반기 중 먼저 5%를 낮춰 44%로 하고, 나머지 5%는 시장상황 등을 보아 가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인하 하겠습니다.





무주택서민 임대차 우선변제금, 3억원 수준으로 인상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영세상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2억 6천만원인 우선변제금도 3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사범 근절

강 · 절도 및 갈취, 불법 사금융 · 채권추심 행위, 보이스 피싱 등 서민경제 5대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서민경제의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의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시행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많이 줄고는 있으나, 신용불량자 신분에서 벗어나더라도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불가능하여 다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3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맞이한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또 신용불량자를 벗어난 이들이 다시 금융소외자로 전락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신용회복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성실 상환자에게 연 4% 금리의 생활자금 대출 확대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한 생계자금 소액대출을 신용회복기금에서도 확대 시행하여 5년간 1,500억 원을 5만 명에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단기연체자를 위한 사전채무재조정제도 지속 운영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자감면, 만기연장 등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개인회생 · 파산신청 전 사전상담제도를 의무화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중고차 라도 하나 몰까?
무슨 소리야.
앞으로 우리가 쓴 대중 교통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거 몰라?
정말이야?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 소득금액 5% 안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앗싸~ 그럼 그 돈으로 게임기 하나 사야지!
그러라고 소득공제 해주는 거 아니거든?!
으아악~! 잘못했어.

서민이 행복한 나라

아이키우기 편한 나라





아이의 미래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걱정없이 아이 키우는 '행복한 나라'

- 서민 중산층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 유치원 이용료 전액 지원
- 남성무급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전환
-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50만원으로 확대
- 영유아에 대한 A형 간염 무료접종 실시
-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서비스 향상
- 다자녀 가구 인센티브 제공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 끌어올리겠습니다

- 교과교실제 전국 확대
- 교과중점학교제 확대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확대 등 국가 의무교육 강화
- 전문계고 선도모델로 마이스터고 육성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강화

우리 아이들을 위한 365일 든든한 급식

- 저소득층과 농어촌 초 · 중 · 고등학생 무료급식 확대

내 집 같이 좋은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내 집 같이 좋은 학교 환경 만들기
- 단위학교 생활지도 책임제 시행
- 학교의 후미진 곳까지 CCTV 설치
- 초등생 등하교까지 확실히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사업 확대
- 피해 · 가해 학생에 대한 맞춤형 상담서비스 Wee클래스 확대
- 학교폭력 엄격 대응
- 청소년 역량개발 · 성장지원 프로젝트 추진

'선생님, 힘내세요'

- 쾌적한 연구 · 지도 환경 조성과 교원 업무 경감
- 학습연구년제 도입
- 수석교사제 도입
- 학교현장의 참스승, 으뜸교사 발굴

걱정없이 아이 키우는 '행복한 나라'

우리나라 2009년 출산율은 1.1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성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보육시설을 원하는 가정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육시설과 보육료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자녀 양육비용 부담이 각 가정의 출산기피 1위의 사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으로 정부정책 체감도 및 만족도는 크게 떨어지고 있어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보육료 지원 대상을 모든 서민과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서민 중산층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 유치원 이용료 전액 지원

고소득층 30%를 제외한 서민 · 중산층의 0~5세까지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료를 전액 지원 하겠습니다.자녀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보육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무급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전환

부부가 함께 출산준비와 산후조리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무급 3일인 남성출산휴가를 2013년까지 유급 5일 휴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50만원으로 확대

현재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임신 · 출산 진료비 제도인 고운맘카드 한도 30만원을 2012년까지 50만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산전 진찰, 분만 등 임신 ·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여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A형 간염 무료접종 실시

최근 발생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A형 간염을 2011년부터 영 · 유아 필수예방 접종항목에 포함하여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1~2세 영 · 유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예방접종실시로 A형 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장보육체계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보육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을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직장보육시설 신축 또는 구입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서비스 향상

민간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도서벽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또 민간보육시설의 환경도 개선하도록 공공정책자금을 활용하여 융자사업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인센티브 제공

다자녀가구는 자녀보육 부담이 매우 큽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확대, 차량에 대한 취 · 등록세 면제, 세대주에게는 공공기관부터 정년연장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 하겠습니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 끌어올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국가의 미래 주역을 만들어가는 근원입니다. 특히, 공고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일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계층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국가 과제입니다.
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소질과 특성에 따라 교육받고 다양한 분야에 도전 · 경쟁하고 경험을 쌓아야만 세계 무대에서 날개를 펼 수 있습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공교육의 경쟁력은 글로벌 시대에 발맞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방식으로 질적인 면을 높여 나가고 모든 계층이 균등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양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교과교실제 전국 확대 / 교과중점학교제 확대

국어, 영어, 수학 등 전 과목에 대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교과교실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중 · 고교의 12.3%인 647개교에 운영되는 교과교실을 2012년까지 전국 1,000개 중 · 고교에 구축하겠습니다. 자신의 잠재력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교과중점학교 제도를 확대하여 2010년에 수학 · 과학 중점학교 100개교, 영어 중점학교 50개교, 예 · 체능 중점학교 40개교를 추가로 구축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확대 등 국가 의무교육 강화

학습 준비물 지원을 중학교까지, 소모성에서 비소모성 자료까지 점진적으로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까지 지원하고 있는 중학교 학생 대상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체 중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른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전문계고 선도모델로 마이스터고 육성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직장인으로서 기술명장 마이스터(Meister)로 성장할 수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선도 모델, 마이스터고를 육성하겠습니다. 유능한 산업계 출신 CEO들이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며, 전액 학비무료, 기숙사 운영, 방과후 활동 등 특화된 집중교육을 실시합니다.
취업 확정자는 최대 4년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고, 군 복무 중 특기분야 근무와 전문학사 취득, 취업 후에는 계약학과 등에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시도 교육규칙 제정을 통해 올해부터 전체 11,000개 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학습연구년제, 단계별 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강화

입학사정관제는 기존 점수 위주의 학생 선발에서 학생의 잠재력, 소질, 창의력 등을 고려한 선진형 선발 체제입니다. 이 제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입학사정관제도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365일 든든한 급식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밥이 보약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에게 점심 급식은 기다려지는 즐거운 시간이자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굶는 아이가 없도록 하고, 무료급식 때문에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는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급식체계를 확대, 개편해 저소득층과 농어촌의 초 · 중 · 고등학생 전원에게 무료급식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동급생들과 어울려 급식 시간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도 필요합니다.
또 방학이나 휴일 같이 등교하지 않는 기간에도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저소득층과 농어촌 초 · 중 · 고등학생 무료급식 확대

밥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저소득층과 농어촌의 초 · 중 · 고등학생 전원에게 무료급식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의 저소득층 학생과 농어촌의 학생 97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2012년까지 무료급식 수혜자 수를 100만 명 더 늘려 197만 명의 학생이 혜택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료급식을 받는 학생이 조금이라도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2011년부터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급식지원 대상 여부를 알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토 · 일요일, 공휴일과 등교하지 않는 방학기간 중에도 밥을 굶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돈돈돈!!
돈 없어서 예방접종
못하는게 웬말이냐!
두둥
아기 인권 보장힘
예방접종비가
너무 비싸!!
아.....!!!!
으아앙!!!!
으아앙!!!!
간염백신
무료접종!
뿌요옹

내 집 같이 좋은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집에서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학교에서는 각 가정의 공부방 보다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여전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집보다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 폭력으로 상처 받는 아이가 없도록 365일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일도 시급합니다. 최근 알몸 졸업식 뒤풀이 등 일부 학교현장의 비뚤어진 행태가 도를 지나쳐 학부모들께 많은 걱정을 끼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학생도 학부모도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집 같이 좋은 학교 환경 만들기

2015년까지 모든 학교 화장실에 좌식 양변기를 설치하고, 교실 및 도서실 등에 냉·난방 시설을 100%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학교 생활지도 책임제 시행

학교폭력을 은폐하고 축소한 교원을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높이겠습니다.

학교의 후미진 곳까지 CCTV 설치

현재 전체 학교의 60% 수준으로 설치된 CCTV를
모든 학교에 모든 후미진 곳까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초등생 등 · 하교까지 확실히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사업 확대

초등학생 등 · 하교 상황을 학부모 휴대폰으로 전송해주는 SMS 문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경고음 서비스, 이동경로 웹상 확인 등을 제공하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피해 · 가해 학생에 대한 맞춤형 상담서비스 Wee클래스 확대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위기학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단위 학교 차원의 전문상담 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급 학교에 전문상담서비스인 Wee클래스를 확대 설치하고, Wee클래스 운영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엄격 대응

학교폭력을 장난이나 사소한 다툼으로 받아들이는 인식과 경향이 남아있어 학교폭력이 현장에서 반복되는 악순환이 생겨났습니다. 경미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학교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을 병행한 선도 조치를 엄격히 적용하겠습니다.

청소년 역량개발 · 성장지원 프로젝트 추진

다양한 청소년의 체험활동을 '미래형 교육과정' 중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인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를 올해 말 까지 97개소에서 166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초 · 중학생 125만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진단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라 상담 · 치료 지원, 사후관리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교육계의 오래된 화두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는 것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듯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한 학교가 됩니다. 행복한 교사는 소신을 갖고 학생들에게 지식과 삶의 지혜를 전하며 그 학생들을 지덕체를 갖춘 인물로 성장시키는 데 밑거름이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교육 외적인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교직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사의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교사들을 위한 환경 개선과 지원 정책으로 교육현장의 경쟁력을 높여 학생들을 미래의 글로벌 리더로 키워내면서 국가의 미래를 튼튼히 하는 꾸준한 투자를 하겠습니다.





쾌적한 연구 · 지도 환경 조성과 교원 업무 경감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신바람 나게 교수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서는 기본 통계자료 입력 외에 일체의 통계공문처리를 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단위학교에 보내지는 공문을 50% 이상 감축하겠습니다. 순회교사 및 인턴교사를 활용한 교원간 업무편중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학습연구년제 도입 /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탁월한 교원을 대상으로 교사형 안식년제(1년)를 운영하겠습니다. 2010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통해 매년 1,000명 수준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고 수업전문가인 수석교사를 1만명까지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학교현장의 참스승, 으뜸교사로 발굴

학교현장에서 학생수업과 교안개발 등 묵묵히 일에 전념하며 제자사랑을 실천하는 참스승을 발굴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국내연수를 실시하는 등 으뜸교사로 발굴하겠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사회







차별과 그늘 없는 따뜻한 나라



빈곤의 악순환, 끊겠습니다

- 기초수급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소외계층 교육복지 대폭 확대
- 기초수급자를 벗어나도록 한시적 의료급여 지원
- 저소득층 거주 지역 300개소 주거환경 개선
- 에너지 복지법제정 및 에너지 바우처 도입
-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기기 설치 지원

함께하는 사회, 장애인 먼저!

-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과 지원 확대
-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양육 지원
-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 장애인 고용 획기적 증대
- 중증장애인 공직기회 확대
-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확대
- 장애인 교육복지 확대
- 장애인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
- 저상버스도입 확대
- 수화기본법 제정 등 장애인 삶의 질 개선

노후, 실버가 아닌 골드입니다

- 노인일자리 확대
-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추진
- 노인단체 법정화 및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
- 시니어클럽 운영 활성화

다문화가족은 글로벌 시대의 뉴패밀리

- 다문화가정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및 내실화
-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 이주여성 인권보호
- 결혼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선
-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나라 법 · 문화 교육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미래 국제지도자 육성

빈곤의 악순환, 끊겠습니다

현재의 복지제도를 사후 처방적인 보호에서 한단계 나아가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사회적 취약계층이 스스로 자립하여, 미래 사회와 경제상황에 대비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체제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초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가난이란 고리를 끊으려면 양질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소외계층의 다원화된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농어촌, 다문화가정, 탈북자 가정 등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복지를 대폭 확대하는 제도 마련도 시급합니다.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공부방, 경로당, 운동시설, 야외쉼터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 살만한 우리동네로 바꿔가는 복지 시스템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또 최근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을 제도화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일도 절실한 과제입니다.





기초수급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사실상 기초수급자이면서 자식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된다고 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교육복지 대폭 확대

경제위기, 다문화가정 및 탈북청소년의 증가, 농어촌의 교육여건 열악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이 다양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어촌의 전원학교, 연중 돌봄학교 등 농어촌학교를 육성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자녀, 탈북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을 다양화하고 제도화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를 벗어나도록 한시적 의료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 증가하여 탈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어 의료비 지출 부담이 커지고,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경우에는 다시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기초수급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증가한 경우에도 의료급여지원을 한시적으로 3년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거주 지역 300개소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 이웃간 만남과 문화 · 휴식 공간을 마련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매년 100개소씩 3년간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 운동시설, 야외쉼터 등 공간 확충과 공부방, 경로당 등 마을환경개선을 통해 희망공간으로 재창조 하겠습니다.

에너지 복지법제정 및 에너지 바우처 도입

저소득층의 상당수는 불가피하게 등유, LPG 등 고가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부지원은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량에도 부족합니다.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보편적 에너지 공급 의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등유 및 연탄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기기 설치 지원

고유가시대에 대응하여 에너지 고효율기기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도록 하여 서민의 복지를 증진 시키면서 에너지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다소비제품에 과세한 재원으로 장애인, 노인 등 복지시설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냉장고 · 일반세탁기 · 선풍기 등 가전제품 교체에 지원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사회, 장애인 먼저!

2009년 6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장애인 수는 242만명이며, 전체인구의 5% 수준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복지사업은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수당,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 보조기기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교통편의 · 교육기회 확대 등 다양하게 확대되고 발전되어 왔으나 아직도 장애인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은 재활치료에 드는 의료비 부담은 높고 근로활동의 어려움, 교육기회 부족 등으로 취업 기회가 적어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의 삶의 질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복지제도의 향상과 사회통합 정책이 절실합니다.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과 지원 확대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비장애인보다 생활비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생계보장을 위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중증장애인 33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에게는 15만원, 차상위계층에게는 14만원, 차상위 초과자는 9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2011년부터 연금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양육 지원

현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가사 · 간병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사 ·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여성장애인에게는 기회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사 · 간병서비스 사업을 확대하여 임신중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6개권역, 인천 · 춘천 · 서귀포 · 양산 · 대전 · 광주에 설치되는 재활병원에 여성장애인 전담의료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현재 시행중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에 준하는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장애인 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활동보조서비스 외에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서비스 등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고용 획기적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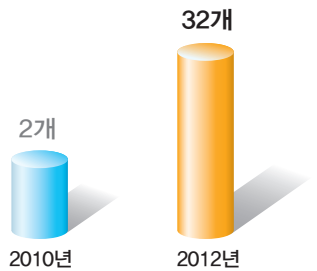
상향 조정된 정부 · 공기업의 의무고용률 2→3%,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 2→2.5% 달성을 위해 실제 장애인 고용을 늘려가겠습니다.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융자지원과 보조공학기기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용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공직기회 확대

중앙행정기관은 2012년까지 의무고용률 3%를 달성하도록 하고, 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때에도 국가 공무시험에 준하는 시험편의(점자문제지, 시간연장 등)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확대

취업기회를 갖는 것이 어려웠던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늘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은 7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이중 중증장애인을 60% 이상 고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현재 2개 사업장이 운영 중에 있고 6개소가 설치 중에 있으며 2012년까지 24개를 더 설치하여 32개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교육복지 확대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에 대하여만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2010년에는 5세 유아와 고등학교 과정 장애학생을 대상에 추가하고, 2011년에는 4세 유아를 추가하며, 2012년까지 3세 유아까지 추가함으로써 장애학생에 대한 국가적 · 국민적 의무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을 대폭 확충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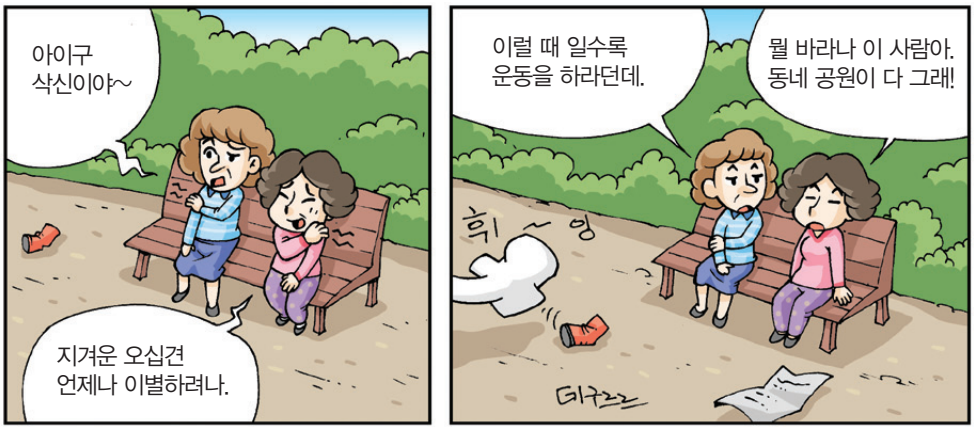
장애인 주거지원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주거 수준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적합한 주거면적 및 주거환경 등 최저주거기준을 정립하고 안전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임대주택 분양을 의무화하고, 저층에는 재활치료실과 고용지원센터 등을 배치하고 상층부에는 주거시설을 설치하는 주택과 복지시설 복합동을 설치하겠습니다.

저상버스도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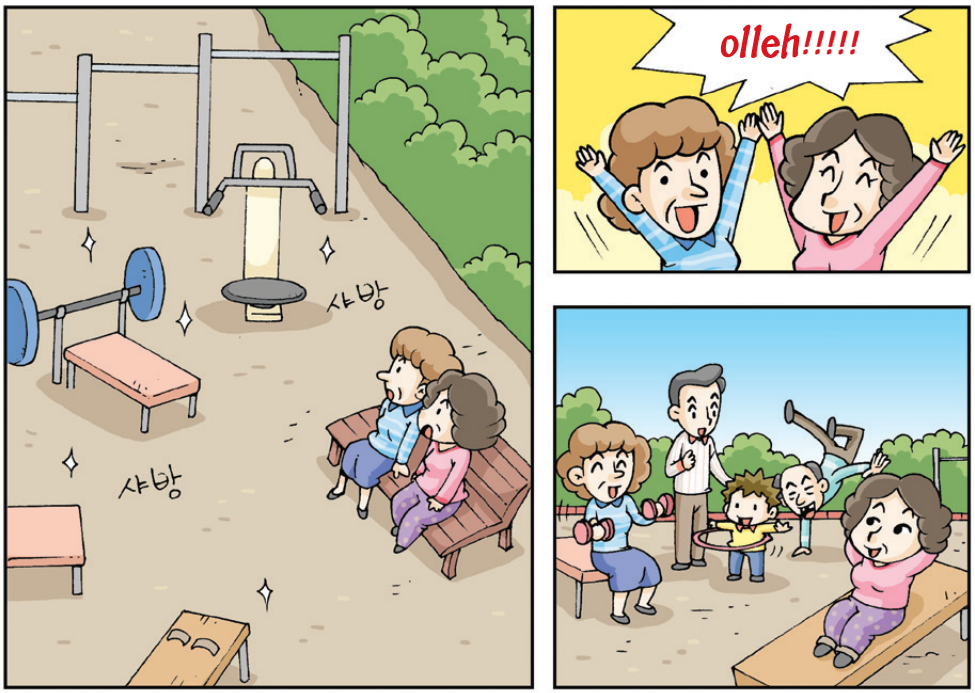
차체가 낮고 계단이 없어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 등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도입을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900대씩 공급하던 것을 1,500대로 늘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수화기본법 제정 등 장애인 삶의 질 개선

수화는 단순히 장애인의 의사소통수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언어 · 문자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수화의 독립적 위상을 인정하는 수화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IT기술을 이용하여 장애인 언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남 · 북한 수화 및 점자 교류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바우처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다 그래'를 한나라당이 뒤집는다!



노후, 실버가 아닌 골드입니다

평균 수명은 연장되고 있는데 반해 저출산이 심해지면서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10년 현재 53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24.3%에 해당하는 1,181만명에 이르게 됩니다. 고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올해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어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반해 노후복지 시스템은 열악한 상태여서 노인에 대한 지원제도의 정비와 보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노인들은 현재 질병, 빈곤을 비롯해 은퇴 후 역할 상실감에 따른 고독과 소외감 등 4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 단체의 활성화와 노인일자리 확대 등 노인의 사회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건강한 삶을 위해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보험 범위 확대도 과제입니다.



노인일자리 확대

현재 연 11만개 수준인 노인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4년까지 연 30만개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월평균 근로시간도 현재 45시간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보수수준을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추진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인틀니를 건강보험급여에 포함시키겠습니다.
2012년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급여대상으로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노인단체 법정화 및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

정부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노인단체가 국책사업의 위탁 및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보장해 노인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노인활동증진 등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위기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로당 난방비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활성화

현재 82개의 시니어클럽을 전국단위로 확대하고 법적지위를 부여하여 시니어클럽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매년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시니어클럽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은 글로벌 시대의 뉴패밀리

우리나라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가 2009년 기준으로 16만 명이 넘고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전체결혼의 11%를 차지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자녀 또한 매년 증가 추세여서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사회에서 다민족 · 다인종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른 대응책은 미흡해 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한 지원서비스의 개선이 절실합니다.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적응해 사회 · 경제적인 몫을 다할 수 있도록 꾸준한 맞춤형 복지 지원정책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

다문화가정의 경제상태, 생활양식 등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및 내실화

다문화가족의 조기적응을 위한 한국어, 문화이해, 가족통합교육 등 종합서비스와 입국초기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 · 번역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 생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원어민강사, 산후도우미, 간병인, 다국적 음식조리사, 바리스타 등 재능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 ·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주여성 인권보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서비스를 확대하여 전화상담 및 현장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주여성 쉼터,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등 보호시설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선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확충해 국제결혼 과정부터 입국 전 · 후까지 다문화가정의 건강상담 · 의료 · 교육 · 취업지원 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나라 법 · 문화 교육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우리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법률과 법 · 문화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미래 국제지도자 육성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미래 국제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외국어 방송을 추진하고 대학입시에 외국어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내라! 중소기업!



국민경제의 중추,
중소기업에 성장엔진을!



글로벌 경쟁력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6대 제조기반기술 선진화
-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TV채널 설치

경영자도 취업자도 신바람 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기간제 근로자 고용 개선
- 대기업 부당 납품단가 개선
- 지자체와 해외진출 기업의 국제투자 분쟁 예방 및 해결 지원
- 민법 개정을 통한 법인 소멸시효 제도 선진화
- 해외진출 U턴 기업 세제 지원
-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폐기물부담금 50% 감면

소상공 자영업자,
작지만 '알찬' 사장님으로 거듭납니다

- 중소유통상권 보호를 위한 SSM 규제
- 중소소매업 공동구매를 위한 5개 광역 물류센터 설치
- 골목슈퍼 1만개를 스마트 샵 나들가게로 육성
- 침체상권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원
-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진흥기금 조성
- 서민계층에 대한 보증부 대출 공급 확대
- 영세자영업자 폐업시 생계안정 및 전직지원 강화

전통시장이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 재래시장 상인 카드수수료 인하
- 전통시장 상인 무담보 저리대출 확대
-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 지역 전통시장 환경 개선

글로벌 경쟁력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수의 99%, 고용의 88%를 흡수하면서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견실한 육성과 발전 없이는 우리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산업은 중견기업군이 취약한 첨탑형 구조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적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해외 마케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정의와 지원 폭도 넓히는 장기적인 정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

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졸업유예기간 이후 부담완화기간 5년을 신설하여 조세 · 금융 부담을 슬라이딩 하는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또 인력 · 기술 · 해외 마케팅 등 핵심 분야 중심으로 잠재력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2020년까지 300개의 World-Class 수준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2012년까지 수출 5백만불 이상의 성장유망한 중소기업 300개를 선정하여 5천만불 이상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기업 전용의 R&D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금융지원과 글로벌브랜드 개발 · 바이어 알선 · 해외 규격인증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6대 제조기반기술 선진화

제조기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문기업 지정제도 도입 등 지속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핵심전략 기술에 대한 단기 상용화와 중장기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제조기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2013년 말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제조기반 전문기업 1,000개를 육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TV채널 설치

2010년 말까지 공익적 홈쇼핑 채널 설립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 애로를 대폭 해소하겠습니다. 홈쇼핑 사업을 통해 창출된 이익액을 중소기업 유통망 확보와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자도 취업자도 신바람 나는 중소기업

경제위기로 악화된 고용회복 속도가 더딘 가운데 청년실업 문제 등 구직자의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취업 희망자가 대기업으로 몰려 취업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취업 희망자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임금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을 이유로 취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은 20만명에 달하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에 파견되는 기간제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고용 불안정성과 정규직과 임금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벌어지는 불공정 계약에 대한 관행도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취업 희망자들이 가고 싶은 회사', '경영자들이 중소기업 할 맛 나는 회사' 를 만들기 위한 중소기업의 기업환경을 혁신할 수 있는 경영 및 근로환경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과 취업자에 대한 장려수당 지원, 기간제 근로자 고용개선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기업 부당 납품단가 개선도 시급합니다. 해외진출 기업이나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한 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워크넷에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DB 6만개 구축과 함께 중소기업 빈 일자리 DB 10만개를 구축 하겠습니다. 워크넷 등록 구직자로서 DB에 등록된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 취업장려수당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고용 개선

불합리한 차별의 예방을 강화하고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여 정규직으로의 이동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제'를 활성화 하여 좋은 파견 일자리를 확대하고, 무허가 · 불법파견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기업 부당 납품단가 개선

'하도급계약 추정제'의 도입으로 단가 · 수량 등과 관련한 계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기업의 핵심기술 탈취 · 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 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해외진출 기업의 국제투자 분쟁 예방 및 해결 지원

투자 유치 단계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제 투자분쟁 예방교육과 외자유치 MOU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을 통해 분쟁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법적보호를 위해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개정을 통한 법인 소멸시효 제도 선진화

법인설립 인가주의를 도입하여 법인 설립의 자유를 강화하되, 인가요건을 구체화하여 법인난립의 폐해는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소멸시효를 단축하고, 단기소멸시효 규정은 삭제하여 거래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해외진출 U턴 기업 세제 지원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 비수도권 지방으로 돌아오는 경우 수도권 소재기업의 지방이전에 준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부동산에 대한 취 ·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폐기물부담금 50% 감면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폐기물부담금을 절반으로 줄여 중소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재활용을 잘하는 기업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도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 자영업자, 작지만 '알찬' 사장님으로 거듭납니다



소상공 자영업자는 2008년 기준으로 전체 사업체의 88%, 전체 종사자의 40%로 국민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고객의 기호변화, 새로운 유형의 업종 출현 등 대 · 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대형마트 직영점인 SSM의 급속한 확산은 골목상권의 붕괴우려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SSM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시설현대화, 공동구매, 물류 및 유통 확산 등 '중소소매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자영업자의 92%가 종업원 5인 미만의 영세자영업자이며, 그 중 약 80%가 종업원 없이 영업하는 등 규모가 영세하여 폐업시 생계의 위협 및 재창업이나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유통상권 보호를 위한 SSM 규제

금년 4월 국회에서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낸 SSM(대형마트 직영점) 규제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무너지는 중소유통업계를 보호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주변 500m까지는 '전통사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점을 제한하겠습니다.

중소소매업 공동구매를 위한 5개 광역 물류센터 설치

2013년까지 광역권별로 5개의 물류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중소소매업의 조직화를 유도하여 공동구매를 통해 제조업체에 대한 구매력을 제고하고, 공동배송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슈퍼 1만개를 스마트 샵 나들가게로 육성

유통 · 물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활용품 및 농수산물 등 대형마트에 대응 가능한 유통 및 배송체계를 구축 하겠습니다. 소매 점포 중 혁신의지가 있는 영세점포에 대하여 2012년까지 1만개를 현대적 시설과 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 등을 갖춘 스마트샵 나들가게로 육성하겠습니다.

침체상권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원

상업 기능이 침체되고 있는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하나로 묶어 종합적 · 체계적인 상권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테마거리 조성 등 환경개선 사업과 공동 마케팅, 공동쿠폰 · 상품권 발행, 축제 · 이벤트 개최 등 고객유치 사업을 지원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진흥기금 조성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창업 및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교육, 컨설팅, 인식개선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서민계층에 대한 보증부 대출 공급 확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하여 저신용 또는 저소득 영세자영업자, 근로자, 농어업인에 대한 보증부 서민대출 지원 체제를 확고하게 하여, 5백만원 이내 긴급생계자금, 사업자금, 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자금이 원활하게 지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자영업자 폐업시 생계안정 및 전직지원 강화

소상공인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연계해 폐업자 및 폐업 예정자 중 취업 희망자를 적극 발굴하여 구직 등록을 유도하고, 자영업 경험활용이 가능한 일자리, 중소기업 빈 일자리 등에 취업을 적극 알선하겠습니다. 실직자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전직지원 서비스를 폐업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SSM, 편의점, 무점포영업 등 신종 업태의 급속한 증가와 소비자 구매패턴의 변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부담이 되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또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만큼 운영자금과 같은 저리 긴급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제 개편 역시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그간 일률적인 공동기반시설 위주의 양적 지원에 치중해온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과 시장특성을 연계, 문화관광형으로 새로운 판로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또 주차시설 확보, 화장실 환경 개선 등 고객 편리성을 높여 소비자들이 찾고 싶은 시장으로 만드는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재래시장 상인 카드수수료 인하

전체 가맹점의 62%에 해당하는 90만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형백화점 2.0~2.4%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1,550개 재래시장 중 연매출이 9,600만원 미만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형할인점 1.6~1.9%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무담보 저리대출 확대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소속 상인들에게 지원하는 500만 원 이내의 저리 대출지원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전통시장별 지원금 한도를 종래 1억 원에서 점포수에 따라 차등하여 최대 5억 원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전통시장을 지역고유문화와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고유 문화를 활용한 문화마케팅,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장을 대표하는 상징물 · 조형물 · 테마거리 설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전통시장 환경 개선

향후 3개년 계획으로 2011~2013년까지 전통시장 60개소에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300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신축 또는 개보수 하여, 전통시장 고객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느끼도록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골고루 잘사는 내고장





전국 방방곡곡 살아나는 지역경제

지역의 경쟁력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 초광역권 개발계획의 추진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 신발전지역 지정 · 지원
- 지역별 맞춤형 개발프로젝트 추진
- 지역 산업기반의 재생 및 확충
- 새만금지역 사업의 본격 착수
- 해외진출기업 국내이전 세제 지원

지방의 발전 잠재력, 확실히 끌어올리겠습니다

- 향토발전세 도입
- 지방과학기술 역량 강화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 · 기업도시 추진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추진
- 도서 · 해안지역 맞춤형 개발 추진
- 지방공기업 구조 조정 및 공사채 발행 규제 강화
-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발전동력 확보
-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기한 연장
-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지역환경 개선으로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 4대강살리기와 하천관리 선진화 추진
-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편 추진
- 군사시설 주변지역 관련 규제 완화
- 지역의 노후 버스터미널 현대화

지역의 일은 지역이! 지방자치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 지방으로 권한 대폭 이양
-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으로 지방재정 확충
- 지방소득세의 탄력적 운영
- 호화청사 · 낭비성 축제 방지
- 지방재정 건전화

지역의 경쟁력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 세계경제의 주요 흐름은 기존의 '국가 경쟁 시대'에서 '지역 · 도시 경쟁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가장벽에 의해 형성되어 온 영토개념이 사라지고 투자여건과 경쟁력을 지닌 도시들이 글로벌 경제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 도시간의 적자생존이란 정글의 규칙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진정 필요한 것은 각 지역의 자족능력을 높여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는 지역경제 체제를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경제권 부상에 대응하여 대외개방적 국가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신(新)국토성장축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또 기존의 정부주도형 지역개발정책의 한계를 넘어서 민간의 창의적 감각과 자본을 활용한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광역권 개발계획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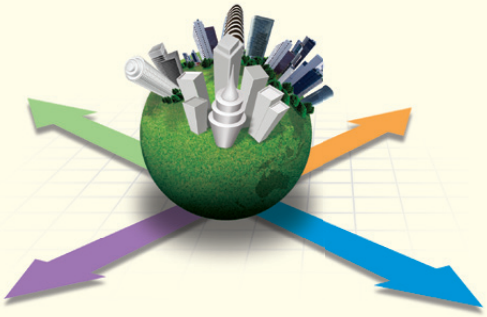
2009년 12월 2일 계획된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안에 따라 남해안 선벨트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동 · 서해안, 내륙권 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여, 금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동해안 에너지 · 관광벨트는 환동해권의 신재생에너지 거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서해안 신산업벨트는 환황해권에 대응하는 차세대 IT, 자동차, 물류 등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남해안 선벨트는 환태평양을 지향하는 기간산업, 물류, 관광여가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남북교류 · 접경벨트는 환경자원 보존과 남북교류 거점지대로 육성하겠습니다. 내륙특화벨트는 해안-내륙의 연계를 위한 특성화된 개발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광역경제권별로 선정된 12개 선도산업과 20개 R&D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함께 신성장 동력펀드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보조금 확대, 임대료 감면 등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선도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인턴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신발전지역 지정 · 지원

경북 북부지역, 지리산 · 속리산 · 덕유산 주변지역, 접경지역 등의 낙후지역과 인접 지역을 묶어 신발전지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정된 지역의 법인 · 소득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및 입주기업 자금,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개발프로젝트 추진

163개 기초생활권 계획에 나와 있는 339개 연계협력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시 · 군에서 창조적 아이디어를 발굴, 독창적인 사업을 개발하면 지원하는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지역 산업기반의 재생 및 확충

시설이 오래된 산단 4개(대구, 대전, 전주, 부산) 우선사업지구의 재생계획 수립을 2010년 12월 완료하고 2011년 재생시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사업을 본격화하는 한편 추가대상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이 5개 국가산단(대구, 포항, 장항, 광주 · 전남, 구미)을 개발하고, 장기임대산업용지를 연간 100만㎡ 내외로 공급하겠습니다.

새만금지역 사업의 본격 착수

새만금 지역의 금강하구 준설토 활용 등 다양한 매립토 조달 방안을 2010년 마련하고 마스터 플랜을 확정하여, 2011년부터 사업을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해외진출기업 국내이전 세제 지원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U턴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세 · 소득세 · 법인등기등록세를 감면하겠습니다.

지방의 발전 잠재력, 확실히 끌어올리겠습니다

지방의 발전 잠재력은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이 굳건하게 발전할 수 있어야 국가의 발전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방산업과 과학기술의 발전기반을 확고히 구축함으로써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방 중소도시를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에 대한 재정여건의 향상, 지역 과학기술과 인재의 양성을 통해 자생력이 있는 공간단위를 구축하여 지방의 지속적 발전을 이끌어내도록 정책 기반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국민이 국토의 어디에 살고 있더라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발전세 도입

지역간 세수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납세자가 주민세 일부를 고향지역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방과학기술 역량 강화

현재 광주 · 전북 등 10곳에 운영 · 추진되고 있는 지방과학연구단지에 2011~2020년까지 총 4,000억 원을 투입해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기초 · 원천 R&D 비용을 2011~2015년까지 20억 원씩 지원하고, 그 중 성적이 우수한 5개 단지를 선택하여 2016~2020년까지는 연 100억 원씩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 · 기업도시 추진

전국에 조성되는 10개 혁신도시를 차질없이 건설하여 2012년까지 157개 대상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획대로 완료하겠습니다. 이전기관의 기존 사옥도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로드쇼 등 매각 촉진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도시도 차질없이 건설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추진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격상하여 접경지역의 범위를 민통선구역으로 확대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 해안지역 맞춤형 개발 추진

도서의 연륙 · 연도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자전거길, 문화 · 생태 · 관광루트 개설 등을 통하여 동서남해안의 186개 연안도서를 관광형, 소득형, 체험형 등 유형별로 개발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구조 조정 및 공사채 발행 규제 강화

방만한 경영과 민간영역과 중복 되는 부실공기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부채 비율이 높은 공기업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채 발행을 제한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발전동력 확보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정체를 감내해 온 미군공역지역과 주변지역에 지방산업단지 및 대학 캠퍼스를 조성하고 도심공원 조성, 반환지역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기한 연장

금년 2월 11일자로 기한 만료된 주택 양도세의 감면제도를 지방에 한해 분양가 인하의 폭에 따라 차등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식(분양가 10% 인하시 양도세 60% 감면, 10% 초과 20% 이하 인하시 80% 감면, 30%이상 인하시 100% 감면)으로 되살려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지정하고 2015년까지 3조 5천억 원을 투입하여 기초과학연구원, 첨단 융복합연구센터, 국제과학대학원, 중이온가속기 등을 설치하여 기초과학 · 융복합연구의 거점지구로 육성하고 연구성과와 비즈니스를 연계하여 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환경 개선으로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식주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주변을 살펴보면 주거 환경은 아직 열악한 편입니다. 특히 지역의 현실은 더 열악합니다. 이제 지역과 도시의 환경 개선에 발벗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4대강의 물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서 시작해, 각 지역의 대표 하천을 지역명소로 개발하는 등 각 지역의 장점을 창출하도록 해야합니다.
노후지역, 군사시설 주변지역 등의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등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4대강살리기와 하천관리 선진화 추진

4대강살리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여타 국가 · 지방하천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2010년 12월 수립하고 시 · 군별 대표하천을 '고향의 강'으로 지정하여 테마파크, 유선장 등 친수 공간을 조성해 지역명소로 개발하겠습니다. 전국 주요하천의 보, 댐, 홍수조절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종합하천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천관리에 자동센서 · 무인로봇 등 첨단 IT기술을 연계하는 '스마트 리버(Smart River)'를 구현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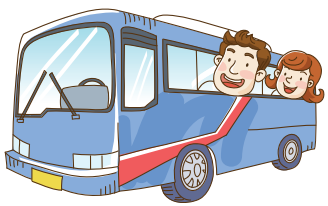
도시의 균형발전과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칭 '도시재생활성화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개별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관련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법제의 재정비를 추진하여 도시 내 균형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군사시설 주변지역 관련 규제 완화

군부대, 탄약 저장고 등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소음피해 방지, 군사보호구역의 범위 조정 등과 함께 지원기금 설치, 산업시설에 대한 조세감면 등 지원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지역의 노후 버스터미널 현대화

지역의 노후화된 버스터미널을 재건축 ·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제도적 ·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버스터미널을 지역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겠습니다.



지역의 일은 지역이!
지방자치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이 땅에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약 2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치로 많은 약속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들이 대부분 말로 끝나 아직도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의 조성은 멀게만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가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지도 않고 재정도 상당부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탓입니다.
국가 · 지방사무의 비율도 8:2,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8:2라 하여 '2할 자치'에 불과합니다.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의 일은 지방 스스로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해야 합니다. 또 많은 권한과 재원의 이양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해서 지방자치의 틀을 단단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으로 권한 대폭 이양

국가사무 4,000여개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국가 · 지방 사무비율을 7 : 3 수준으로 조정하고 소관사무에 대해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업인 · 허가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으로 지방재정 확충

2013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인상하여 약 4조원의 지방재정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의 탄력적 운영

지방소득세의 세율과 부과 대상을 지방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비과세, 감면 등 조세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화청사 · 낭비성 축제 방지

자치단체 표준 청사 면적을 법제화하고 청사운영 경비, 건축비, 에너지 사용량을 공시하여 주민들이 쉽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경비의 5%를 절감하여 일자리 늘리기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건전화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 노력을 평가하여 지방교부세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약 2조 7,000억 원을 인센티브로 배정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어촌





매력 있는 농어촌, 경쟁력 있는 농림수산업

농림수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쌀 제 값 받기
- 친환경농업 적극 추진
- 한국 농어업을 이끌 식품산업 육성
- 농수산물 팔아주는 농 · 수협으로 조기 개편
- 수산자원 관리로 어민 소득기반 마련
- 산림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 콩과 사료용 작물의 자급률 확대
- 농가부채문제 해결에 집중 지원

농어촌이 활기찬 공간으로 바뀝니다

- 농어촌 주민이 공동 경영하는 회사 설립 지원
- 공동으로 숙식하는 농어촌 '실버 홈' 조성 지원
- 전원마을을 2013년까지 300개소로 확대
- 농어촌 · 도서지역 물 문제 해결
-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피해 보상 확대
- 농어촌 30만호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안전하게 교체

농어민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 2011년부터 농지연금사업 실시
- 농작업 재해로부터 안전보장
- 농어촌 어디서나 30분 이내 응급처치 가능
- 여성 농업인센터를 군마다 1개소 설립 지원
- 농어촌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농림수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008~2009년 연이은 풍작으로 쌀값이 떨어져 농민들의 가계는 오히려 타격을 받았습니다. 쌀은 평년작만 되어도 매년 15~20만 톤이 남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해 쌀을 제 값 받도록 하는 농가소득 안정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농수산물을 원재료 상태로 단순 판매하는데 그칠 것이 아닙니다. 친환경농업, 원재료 가공식품 산업 육성 등으로 판로를 뚫어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쌀 제 값 받기

쌀값 회복을 위해 2009년산 쌀(벼) 20만톤을 5월부터 추가 매입하고, 2010년산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벼 재배면적에 콩 · 옥수수 등을 재배할 경우 1ha당 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쌀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공공비축제를 개선하고, 쌀 이력제 및 등급표시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며, 대형 쌀유통회사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하여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군납 · 학교급식 등 수요처를 확대하겠습니다. 밀가루를 쌀가루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국내산 쌀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를 2013년까지 350개소로 늘리고, 농기계은행의 농작업 대행면적을 벼 재배면적 20%까지 늘려 쌀 생산비 10%를 절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적극 추진

친환경농업이 대세입니다. 우리 토양에 맞는 '맞춤형 비료'를 확대 공급하여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비료를 대폭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한국 농어업을 이끌 식품산업 육성

식품가공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식품 클러스터 확대 조성 및 한식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치 · 장류 등 우리 고유의 발효식품산업 육성과 함께 프리미엄 천일염 등 기능성 식품시장도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농수산물 팔아주는 농 · 수협으로 조기 개편

농 · 수협을 경제사업 위주로 조기에 개편하여 농어민 여러분께 혜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법'을 제정하여 농업인의 거래 교섭력을 높이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류효율화와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중앙도매시장 리모델링사업을 201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수산자원 관리로 어민 소득기반 마련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 조성을 전담할 '수산자원관리조성 전담법인'을 설립하고 어업인 · 어촌공동체가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자율관리 어업공동체를 2014년까지 1,40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국토의 2.9배인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바다목장으로 개발하여 참다랑어 등을 대규모로 양식하는 기반을 갖추고, 서 · 남해안 청정갯벌을 친환경 양식어장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산림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에너지효율이 높은 목재 펠릿의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2012년까지 산림탄소순환마을 여덟 곳을 조성합니다. 산약초 · 산양삼 등 새로운 산림 소득원을 발굴 · 육성하고, 임산물의 저장 · 가공 · 유통기능을 갖춘 산지종합유통센터를 2012년까지 7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숲에서 행복을 찾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서비스 제공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콩과 사료용 작물의 자급률 확대

세계적인 식량위기시대를 맞아 현재 주식용의 경우 54%로 되어 있는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자급률이 낮은 콩류 · 사료용 작물 등의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농가부채문제 해결에 집중 지원

부채농가의 자구노력을 기반으로 하는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을 2015년까지 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농업경영 회생자금도 2012년까지 1,000억 원으로 늘려 농가 부채문제 해결에 집중하겠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농가 부채 발생을 최소화 하고,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경영비 절감 등 소득경영안정장치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이 활기찬 공간으로 바뀝니다

농어촌지역은 산업기반이 부족해 일자리 부족 현상으로 젊은이들이 떠나고 출산율은 떨어지면서 노인인구가 주를 이루는 인구고령화 현상이 심합니다. 일자리를 찾아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농어촌의 활력은 나날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농어촌은 도시에는 없는 쾌적함, '농어촌다움'이라는 천연의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2007년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 중 56.3%가 장래 농어촌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수요를 살리면 농어촌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높은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베이비 붐 세대 712만 명의 은퇴가 본격 시작되는 올해를 시작으로 농어촌을 활기찬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특단의 지원 조치를 본격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어촌 주민이 공동 경영하는 회사 설립 지원



농어촌주민이 주인이 되어 관광, 건강식 제공, 지역 농산물의 가공식품 생산 · 판매 등을 담당하는 농어촌 공동체회사의 설립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창업보육센터를 지정 · 운영하고, 관련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활동비,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으로 숙식하는 농어촌 '실버 홈' 조성 지원

농어촌지역에 나이 드신 어르신이 혼자 사시는 경우 숙식에 어려움이 많고, 대화 상대가 없어 외로움이 큽니다. 이 분들을 위해 공동으로 숙식을 해결하고 찜질방, 물리 치료실 등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농어촌 주거 공간인 농어촌 '실버 홈'의 모델을 개발하고 2011년부터 시범적으로 설립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원마을을 2013년까지 300개소로 확대

농어촌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도시민의 귀농어촌을 촉진하기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2013년까지 총 300개소로 확대 추진합니다.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 도서지역 물 문제 해결

농어촌 면단위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47.4%으로 전국 92.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2014년까지 국고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여 상수도보급률을 선진국 수준까지 높여 전 국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낙후 지역 정수장 180개소를 개선하여 맑은 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피해 보상 확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 대상을 현행 멸종위기 야생동물에서 멧돼지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도 추가하겠습니다. 피해보상액 수준도 높여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30만호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안전하게 교체

오래된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처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영세 농가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한편, 방치되거나 불법 처리로 인한 환경위해 우려를 해소하고 농어민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농어민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34.2%로 국가 전체 10.7%에 비해 아주 높지만 안정적인 노후대책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농기계, 농약사용으로 인한 각종 상해, 중독 등 농업인의 농작업 사고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농작업 재해율은 1.29%로 산업 전체 0.66%에 비해 아주 높으나 안전공제제도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개선이 절실합니다. 또한 많은 농어업인들은 각종 만성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나 의료체계가 부족하고, 교육 · 주거 ·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삶의 질이 도시에 비해 뒤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선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지연금사업, 농작업 재해 안전보장, 응급의료 체계구축, 법률 서비스 지원 등 총체적인 복지 지원 확충이 필요합니다.



2011년부터 농지연금사업 실시

나이 많으신 농업인의 경우, 농지 이외에는 자산이 부족하여 안정적인 노후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고, 종료 시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농지연금사업'을 2011년부터 실시합니다. 가입한 농업인은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농작업 재해로부터 안전보장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재해공제 보상수준을 2014년까지 산재보험수준에 해당하는 1억원으로 올리겠습니다. 농업인이 농업활동 중 발생된 사고와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작업으로부터의 안전'을 실현하겠습니다.





농어촌 어디서나 30분 이내 응급처치 가능

농어촌은 인구 노령화와 각종 만성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 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의료뿐만 아니라 농어촌 주민이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서비스 기준을 제정하겠습니다. 농어촌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농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센터를 군마다 1개소 설립 지원

여성농업인센터를 2014년까지 전국 군마다 1개소로 확충하고 노후화된 센터를 개보수하여 여성친화적인 생활공간이 될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의 농작업에 적합한 소형 농기계를 개발하고 이를 농기계임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도우미 지원 대상을 늘려 농어촌 경로당, 다문화가정에까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농어촌 등 법률보호 소외지역 주민들이 법률구조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 · 군 법원 소재지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52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안전한 사회





빈틈없는 사회!
안심 코리아를 당신에게

우리 아이 '안전' 책임지겠습니다

- 아동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 등교부터 하교까지 안전서비스 실시
-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 성폭력 범죄자 유전자 정보 DB화 추진

빈틈 없이 지켜드리겠습니다

-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설치
- 민생침해사범 근절
- 치안센터 24시간 상주근무자 배치
- 기업형 조직폭력 엄단

재해 · 재난 NO, 이제 안심하세요!

- 재해예방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재난신고전화를 119로 일원화
- 소방공무원 3교대 실시
- 위험시설 및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보험가입 의무화
- 취약계층 전기 · 가스시설 무료 안전진단
- 농어촌 119 구급지원센터 설치

클린 코리아를 국민의 손에

- 어린이 환경안전 가이드라인 제정
- 석면피해 구제
- 위해식품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
- 농축산물 안심 소비 확대
- 수돗물 품질 개선
- 폐광지역 오염 방지

우리 아이 '안전' 책임지겠습니다

최근 아동을 상대로 한 유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09년 2,700여건으로 2005년 대비 52% 증가했고 재범률도 40%에 이르는 등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부모들은 우리 아이에게 닥칠지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게 됐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칩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아동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중형을 선고 받도록 하며 가석방 금지를 통하여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하고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13세 미만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등교부터 하교까지 안전서비스 실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아동의 위치정보, 학교 및 학원의 등하교 시간, 위험지역 진입 시 위험신호를 부모의 휴대폰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14,765개소에 이르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역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주변 도로 등 8,000여개 소에 내년까지 CCTV 설치를 마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자 유전자 정보 DB화 추진

살인, 강도, 강간범 등을 대상으로 DNA정보를 취득하여 범인 검거와 수사 등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으악!!
덕
엄마!
놀랐잖아!!!
쉿!
누구 이상한
사람 따라오지
않았니?
엄마가 더 이상해
보이거든요!!
세상이
워낙
흉흉해서...
보세요!
이젠 등하교 시간을
휴대폰으로 전송해
준다고요.
오후 1시
10분에
하교했습
니다
어머~
내가 왜 그
걸 몰랐지?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엔 어김없이
CCTV가 있다고요.
이젠 걱정 붙들어
매세요!!
어머!
난
그런줄도
모르고...
악!!!
누가 누굴
걱정해야
하는건지...

빈틈 없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최근 살인 · 강도 · 성폭행 등 강력범죄,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폭력을 동원한 불법 사금융 추심행위, 불법 다단계 상품 판매 및 수신 행위, 부동산 투기 조장, 농산물 절도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가 증가하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생활 관련 피해는 서민 생활에 전가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치안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범죄로 인해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절실합니다.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

범죄에 취약한 6,000여개 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범죄 발생 시에도 빠른 시간 내 범인을 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설치

연간 600억 이상의 기금을 마련하여 범죄 피해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민생침해사범 근절

검 · 경의 총력 수사체제를 확립하고 기획수사와 집중단속을 통해 범인 검거율을 높여 범죄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습니다.



치안센터
340여개 설치

치안센터 24시간 상주근무자 배치

경찰관이 가족과 함께 치안센터에 거주하면서 근무하는 '직주(직장 · 주거)일체형 치안센터'를 향후 5년 동안 340여개 만들어 24시간 범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형 조직폭력 엄단

조직폭력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최대한 격리하고 이들의 자금원을 적극 차단함으로써 조직폭력을 발본색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 재난 NO, 이제 안심하세요!

지구 온난화 등 이상 기후 현상, 난개발에 따른 재해 취약요인 증가로 재해가 점차 대형화 · 다양화 추세에 있으며, 대책도 예방보다는 복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년 재해가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도 매년 3만명을 넘어 전체 사망자 수의 1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사고가 났을 때는 신속히 대처하는 지원 체제를 갖추는 것은 물론 사후 약방문식 처방에서 벗어나서 예방에 힘쓰는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국을 재해 · 재난 없는 안전 사회로 만들기 위해 재해 예방 사업을 계획 기간 내에 마무리하고 제도적으로 취약한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재해위험지구 389개소를 2013년까지 1조 5,000억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소하천을 지방하천 수준으로 정비하기 위해 8조 7,00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재난신고전화를 119로 일원화

환경, 의료, 가스 등 기능별 · 기관별로 되어 있는 재난신고전화 11종을 119로 일원화하여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3교대 실시

재해 · 재난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직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 중 소방인력 3,200명을 보강하는 등 3교대율을 58% 수준에서 95% 수준으로 제고하겠습니다.



위험시설 및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보험가입 의무화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위험시설이나 단란주점 등 소규모 다중 이용 업소에 대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불의의 재난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영세업자의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전기 · 가스시설 무료 안전진단

매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로 전기 · 가스 시설 교체 등 안전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농어촌 119 구급지원센터 설치

119 구급차가 없어 출동시간이 30분 이상 지연되는 농어촌 읍면을 대상으로 매년 50개 지역에 119 구급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농어촌 거주자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여 노인전용 구급차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코리아를 국민의 손에

환경 유해물질의 급격한 증가로 생활환경이 오염원에 노출되고 식품에서도 유해물질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생활환경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한 먹을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해식품의 위협으로부터 식탁을 보호하고 주 먹거리인 농축산물과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합니다. 또한 가정이나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예방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린이 환경안전 가이드라인 제정

어린이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생활 지침을 만들고 어린이 사용 용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해성이 큰 어린이용품에 대한 리콜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

석면피해구제법령을 제정하고,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하여 석면 노출로 발생하는 각종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 요양수당 등 최대 3,000만 원 수준의 구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식품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

연 매출 500억이 넘는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위생수준 안전평가를 매년 실시하겠습니다. 수입하고 있는 식품이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현지에서 직접 제조업체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유통이나 판매 단계에서 위해식품 발생 시 신속히 회수할 수 있는 안전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안심 소비 확대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수입쇠고기 수입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유통이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사료에 축산항생제 첨가를 중지하고 일반 농가에서 사용하는 고독성 농약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수돗물 품질 개선

수돗물의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향후 5년간 500억 원을 투입하여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감시항목을 80항목에서 100항목으로 늘려 수돗물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폐광지역 오염 방지

매년 1,000억 원 이상으로 광해방지 예산을 확대하여, 폐광지역의 오염을 방지하고 오염 토양을 복원하여 중금속 등 오염원이 상류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2012~2016년까지 '제2차 광해방지기본계획'에 '4대강 상류하천 광해방지사업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대응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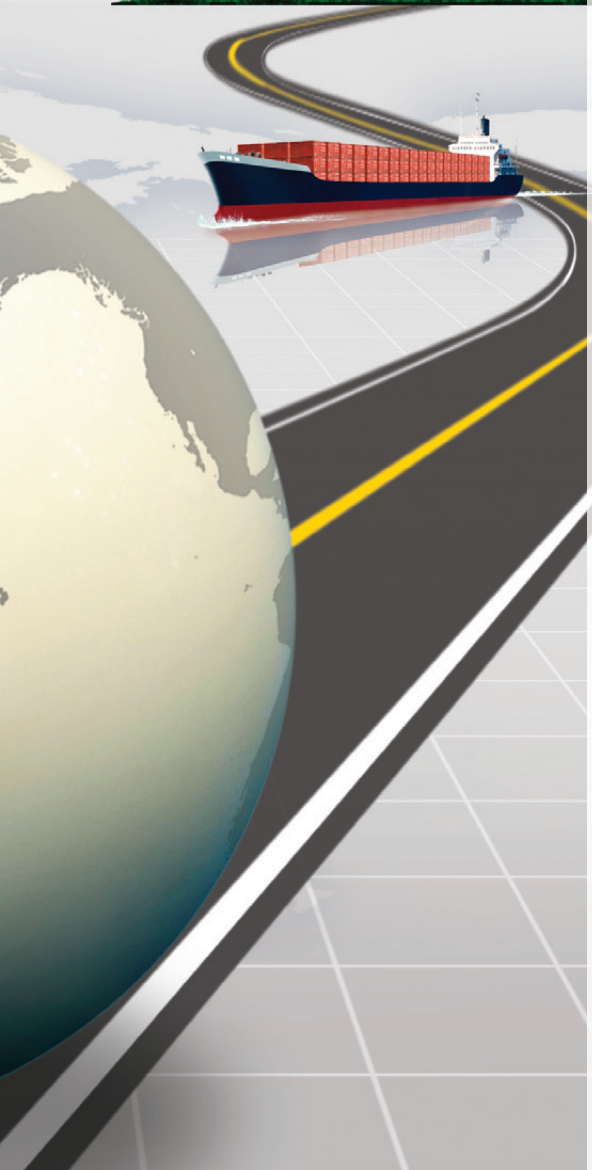


미래주니









도약하는 대한민국, 희망찬 미래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그린 브랜드가 됩니다

- 저탄소 녹색성장 경제의 기틀 마련
- 신재생 에너지산업 본격 육성
- 버려지는 폐자원을 청정에너지로 전환
- 저탄소 녹색성장 전문 인력 양성

도시가 살아 숨쉬는 푸른 국토를 만듭니다

- 저탄소 녹색 도시공간 조성
- 도시내 자투리 공간을 생태공간으로 조성
- 수자원 · 해양분야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친환경 생태관광 인프라 조성

그린 라이프 다함께 만들어가요

- 친환경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 누구나 편리한 녹색 교통체계 구축
- 자전거 거점도시 10개 육성 및 자전거 도로 확충
- 자동차세 연비기준 개선 및 전기자동차 세제 지원
- 자동차 그린패스제도 도입
- 백화점 등 재사용종량제봉투 전면 사용

대한민국호에 새로운 엔진을!

- 신성장동력의 가시적 성과 도출
- 민간투자 활성화와 시장형성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 신흥자원부국에 대한 시장 개척 강화
- 해운 · 물류산업 환경 개선

세계 최강 과학기술 강국 코리아

-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 확대로 국가경쟁력 기반 강화
- 우주기술 10대 강국 건설
- 원자력 3대 강국 건설
- 과학기술인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대한민국의 희망, 미래인재 양성

- 세계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 재외 한국학교 선진화
- 국제기구 진출 지원
- 도덕이 경쟁력, 선비문화 생활화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그린 브랜드가 됩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체계가 강화되고 있고,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9년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온실가스 줄이기 목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 환경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온실가스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대비 30% 감축을 발표하는 등 국제공조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와 공급 구조로 인해 신속한 기후변화 대응이 어렵고, 녹색기술 수준 역시 아직 취약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7대 녹색 성장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에너지 경제구조로 개편하고 신재생 에너지산업을 본격 육성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국가적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경제의 기틀 마련

청정 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저탄소 에너지 경제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기존 주력산업을 녹색화하고, 녹색기술 · 첨단융합 산업 등 3대 분야 17개 부문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겠습니다. 범정부적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2009~2013년까지 5년간 107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2010년 2,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 및 20~30% 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산업 본격 육성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 육성을 위해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2012년부터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버려지는 폐자원을 청정에너지로 전환

가연성 폐기물, 바이오가스 등 버려지는 폐자원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원유대체 효과,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전문 인력 양성

녹색 기술산업을 선도하기 위하여 시급한 온실가스 전문 인력 등 10개 분야 관련 전문 인력 10,000명 양성사업을 2013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 녹색금융, 환경보건 등 신규 전문 인력 양성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가 살아 숨쉬는 푸른 국토를 만듭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에너지도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는 구조로 인해, 도시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상 기후로 인한 홍수 · 가뭄, 해수면 상승 등의 재해에 대비한 대응체계도 아직 미흡합니다.
국민의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녹지를 늘려 이상기후에 대비하면서도 쾌적한 주거환경까지 조성시키는 자원순환형 녹색도시 조성과 도심 내 녹지공간 창출이 필요합니다. 또 이상 기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수자원분야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기후 친화적인 해양이용 관리 등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저탄소 녹색국토 · 녹색도시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대응책을 시급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 도시공간 조성

에너지 절약형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심 내 공원 · 녹지공간을 확대하여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창호 · 외벽 단열기준을 20% 강화하는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건축물 부위별 설계기준도 강화하겠습니다.

도시내 자투리 공간을 생태공간으로 조성

도시 내 콘크리트로 메워져 있는 작은 빈 공간을 도시 숲으로 조성하여 도시생태환경을 복원하겠습니다. 특히 도로와 주변부지 사이 자투리 땅 활용을 위해 우리 동네 자연숲 조성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수자원 · 해양분야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기후변화 해양 감시망을 구축하고, 해수면 상승률 예측 및 연안취약성 평가를 위한 장치를 개발하겠습니다. 조류 · 조력 · 파력 등 해양에너지 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이상 기후에 대비, 중소규모댐 건설, 권역별 급수체계 조정사업,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개발 등 홍수 · 가뭄 걱정 없는 안정적인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친환경 생태관광 인프라 조성

한국형 생태관광모델을 마련하고 생태체험, 숙박 등 생태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국립공원에 도시형 · 산악형 · 해안형 등 3개 테마로 고품격 탐방휴양 종합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친환경 숙박시설인 에코릿지(Eco-lidge)도 설치하겠습니다.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감상할 수 있는 생태문화 탐방로 1,000㎞를 2012년까지 구축하겠습니다.

그린 라이프 다함께 만들어가요

건물, 교통 등 비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을 확산해야 합니다. 환경,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철도 등 대중교통, 특히 자전거 중심으로의 교통체계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자전거도로는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자전거 수송 분담률도 1.2%로 일본 14%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또한 미국, EU 등 선진국의 온실가스, 연비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함에 따라 국내자동차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친환경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건축업자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신 · 증축 또는 개축하여 취득할 경우 에너지 절감률 또는 CO_2저감률에 따라 취 · 등록세 5~15%를 차등 감면하겠습니다.

누구나 편리한 녹색 교통체계 구축

경부2단계 · 호남 KTX를 조기 완공하여 녹색철도망을 확대하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수도권 대심도 철도망을 검토 · 추진하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ITS 인프라 확대, 고속도로 환승시설 설치, 간선급행버스 전국 대도시권 확대 등 승용차보다 빠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 전국 호환 교통카드제 도입을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 거점도시 10개 육성 및 자전거 도로 확충

자전거 이용여건이 좋은 10개 중소도시에 자전거 이용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도심생활형 · 지역특화형 자전거도로, 도시간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2020년까지 자전거 교통분담률을 15% 수준까지 높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비기준 개선 및 전기자동차 세제 지원

자동차세를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 또는 CO_2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내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 · 등록세를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차 수준까지 감면하겠습니다.

자동차 그린패스제도 도입

배출가스 농도가 낮은 친환경차량도 무조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현행체계를 개선하여 저농도 배출차량은 2011년부터 정밀검사를 면제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백화점 등 재사용종량제봉투 전면 사용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를 쇼핑봉투로 사용하고, 이를 가정에서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활용하여 배출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호에 새로운 엔진을!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 질서와 산업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위기대책과 함께 포스트 금융위기에 대비한 새로운 경제성장 비전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10년, 20년 후 앞으로 대한민국이 무엇으로 먹고 살아 갈 것인가?'와 직결되는 신성장동력 육성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미래 대한민국 경제를 주도할 신성장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계획과 투자 법안 마련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신성장동력의 가시적 성과 도출

신성장동력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 관리하고 신성장동력 예산 확대 및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신성장동력 펀드를 추가조성, 그 규모를 2010년 9,000억 원에서 2013년 2조 3천억 원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신성장동력 분야 부가가치 총액은 연평균 12% 증가가 예상되며, 수출액은 연평균 18% 증가하여 2013년 약 4,300억불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민간투자 활성화와 시장형성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입지가 제한되는 농업진흥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도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방송광고 · 애니메이션 규제를 합리화하고, 방송통신융합 활성화를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부담금 감면 등 방송 · 통신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카, 연료전지차 등 그린카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신흥자원부국에 대한 시장 개척 강화

신흥자원부국에 수요가 높은 인프라를 중심으로 패키지형 자원개발을 활성화 하고, 중남미 · 아프리카 · 중앙아시아 등에 대한 자원협력위원회 및 사절단 파견 등 자원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협회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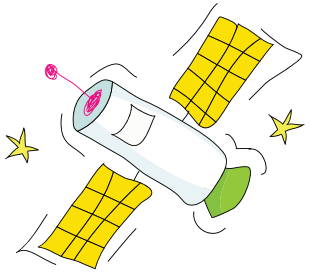
해운 · 물류산업 환경 개선

화물 직접 운송의무제 도입으로 다단계 · 위수탁제를 개선하고, 화물운전자복지재단을 설립하여 화물차주 복지를 개선하겠습니다. 수도권 등에 내륙물류기지를 건설하여 물류거점을 확충하고, 국가물류 통합정보센터에서 창고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에서 연안해운으로 전환된 화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연안 화물선 유가보조를 합리화 하겠습니다.

세계 최강 과학기술 강국 코리아

기초 · 원천기술개발은 국가경쟁력의 근간이며 신성장동력의 원천입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선행하면 기업의 수익이 증가되고, 일자리 창출기반이 조성됩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 연구개발 R&D 투자비중은 2008년 기준 3.37%로 높은 수준이지만, 절대규모는 2008년 34.5조로 나타나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녹색기술, 융합기술, 나로호의 성공적 발사를 위한 우주기술, 원자력 기술 등 핵심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원 체제가 필요합니다.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 확대로 국가경쟁력 기반 강화

정부 ·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GDP 대비 국가 연구개발 R&D 투자비율을 2012년까지 5%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정부 연구개발 R&D의 기초 · 원천 연구 투자 비중을 50%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중이 확대되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신성장동력, 원천기술개발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 세액 공제율을 당기분 투자액의 30%, 대기업은 20%로 확대하겠습니다.

우주기술 10대 강국 건설

나로호 제2차 발사, 다목적실용위성, 과학기술위성의 성공적 개발과 발사를 통해 우주기술 강국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인공위성 및 발사체 핵심기술 자립과 전문 인력 양성, 독자적인 발사 기반 마련으로 우주기술 10대 강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원자력 3대 강국 건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리 고유 중소형원자로를 2011년까지 개발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수출형 신형연구를 건설하고 세계연구용 원자로시장 진출기반을 강화하여 세계 3대 연구로 공급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연구성과 중심제도(PBS)를 개선하여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기본인건비를 70% 수준까지 확충하겠습니다. 과학기술발전장려금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 추진, 퇴직과학기술자 활용사업 확충 등 과학기술인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 미래인재 양성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극복하고 우수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장학제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창의적 기초 · 원천연구의 산실인 대학을 과학인재 양성의 산실로 만들고 세계적 연구개발 거점으로 육성하는 과제도 절실합니다.

또 국제기구 진출도 더욱 활발해져야 합니다.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인력이 늘어날수록 세계 기술정보 교류를 통해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인 국제기구 진출인원은 1991년 유엔가입 이래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국제 감각을 지닌 700만 재외동포 인적자원을 우수인력으로 적극 개발하고 활용하는 지원체제 마련도 필요합니다.





세계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이공계 국가장학생, 대통령 과학장학생, 이공계대학원 연구장학생 등 이공계 장학금 지원 대상을 2009년 2만 명에서 2012년까지 3만 5천 명으로 대폭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을 강화하여 우수인력 1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세계적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재외 한국학교 선진화

재외 한국학교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재외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재외국민을 글로벌 인적자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학교운영비 · 인건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수교원을 확보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국제기구 진출 지원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파견규모를 확대하고 유엔 사무국이 주관하는 국별경쟁시험을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국제기구 진출여건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기구인사센터 운영을 통해 국제기구 진출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도 지속 개최하겠습니다.

도덕이 경쟁력, 선비문화 생활화

'하드파워' 중심의 세계질서가 가치 · 문화 · 이념 · 설득력 · 외교력 등 '소프트파워' 중심으로 이동해가면서 동양적 문화와 가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양적 가치의 핵심인 '선비사상'이 미래가치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공직자, 기업인, 교사, 학생들에게 선비문화 체험 · 연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가품격 향상!





글로벌 리더 코리아, 꿈이 이루어집니다

글로벌리더 코리아!

-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

내집 같은 병영, 행복한 군인

- 병영환경 개선 및 군 복지 증진
- 군 복무 중 학점 인정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면제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주택청약시 가점부여
- 군 복무 중 희생군인에 대한 보상 및 예우 격상

법과 질서가 살아 있는 나라

-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일관된 법 집행
- 법 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추진

부정 부패가 발 붙이지 못하는 사회

- 공공부문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 지역 토착비리 척결 및 범죄수익 철저 환수

'우먼 업 코리아'

- 국제성평등 지수 향상
- 여성분야 국제협력 강화
- 공공분야 여성대표성 확대 및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 발굴
- 가족이 함께하는 남녀평등한 생활문화 확산
- 양육과 가사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시스템 마련
- 폭력과 범죄 없는 도시 만들기
- 여성이 안심하는 주거환경 만들기
- 여성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시환경 만들기

가정의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
-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 취약한 가정의 지원 강화
- 소외계층의 여성 인권 보호

글로벌리더 코리아!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세계 15위, 무역규모 세계 12위로 IT 강대국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국력에 상응하는 우리의 국제사회 내 선도적 · 능동적인 외교역할에 대한 요구와 기대치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리더로 우뚝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다양한 국가 인지도 제고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합니다. 특히 G-20 의장국으로서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뤄내 대한민국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지원 체제를 갖춰 나가야 합니다.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G-20 의장국으로서 금년 11월에 열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거시경제 공조, 금융규제, 국제기구 개혁 등 의제선정 및 국가간 합의도출에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다양한 국가 인지도 제고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국내외 한국 이미지 인식 확산과 국가품격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겠습니다.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12~13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국제 핵안보 체제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역할증대 계획을 밝히고 다음번 〈2012 핵안보정상회의〉의 서울 개최를 제의, 각국 정상들의 전폭적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이번 결정은 원자력 평화적 이용의 모범국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반영한 것으로, 금년 11월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서울 개최와 함께 경제뿐 아니라 국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국가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한나라당은 핵안보정상회의의 준비과정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 등 우리나라의 안보가 더욱 튼튼해지도록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고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을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여 환경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오 한국 걸그룹 짱 좋아.
쉿. 조용히 좀 해줘.
노노. 공부 그만하고 나랑 같이 노래 들어.
나 바쁘신 몸이야.
와이?
G20 정상회의가 올 11월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건 알지?
물론. 우리나라 친구들도 한국 대단하다고 난리였어.
나 G20 정상회의 자원봉사 지원했거든.
드디어 내가 대한민국과 함께 세계무대에 서는 거지.
으하하하
오~ 써프라이즈~ 내가 이렇게 응원해 줄게.
(따따따따따) 대~한민국!!
따따따따
따따
이건 월드컵 아니거든?

내집 같은 병영, 행복한 군인

국가 및 사회발전에 상응하여 병영 환경 개선과 군인 · 군인가족의 복지증진을 통한 군 사기 진작이 필요합니다. 제대군인은 군 복무로 인해 사회진출이 지연되어 학업, 구직, 결혼, 내집 마련 등 사회 정착 기반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국방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제대군인에게 군 복무로 뒤처진 사회 적응 역량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지원제도 마련이 절실합니다. 또 현역 입영자의 83%가 졸업자를 포함한 대학 재학자이지만 학업준비 지원제도도 미흡합니다. 군 복무 중에도 학점 인정을 받도록 하는 등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참전유공자(45만 9천명)의 사망 시 예우를 위한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도 시급합니다.



병영환경 개선 및 군 복지 증진

병영시설을 현대화하고 군 주거시설을 개선하고 위험수당, 함정수당, 조종사수당 증액 등 군 특수성이 반영된 보수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민간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단급 진료기관의 인원 · 장비 · 시설을 보강하고, 의무수송용 헬기를 도입하겠습니다. 군 복무 중 학점취득,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복무 전역자의 취업여건을 보장하겠습니다.

군 복무 중 학점 인정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면제

군 복무 중 학점인정 대학을 확대하고 장병 1인 1자격 취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 기간 중에 자격기본법에 해당하는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를 면제하겠습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주택청약시 가점부여

무주택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군 복무기간에 따라 주택청약시 2~6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하여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전하고 군 복무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군 복무 중 희생군인에 대한 보상 및 예우 격상

국방의무 수행 중 순직 군인에 대한 사망보상금을 현재 3천 6백만 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 희생된 젊은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예우가 법제화되도록 일반사병보상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는 참전유공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호국원 안장능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법과 질서가 살아 있는 나라

우리나라의 법질서 수준과 준법의식은 세계 10위권 경제규모나 국가적 위상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특히 불법집회 · 시위 등 후진적 시위문화와 공권력 경시풍조로 인해 막대한 사회 · 경제적 비용이 소모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합리적 시위규범 및 관행 확립 등 법과 질서의 준수 및 국가 위상에 걸맞는 선진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서민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평하고 일관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펼치는 일도 필요합니다.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일관된 법 집행

불법폭력 시위, 불법 파업 등 불법집단 행동과 공권력 훼손에 대하여는 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고수하고 무관용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특히 수사전문 인력 양성,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집회시위 대응체제 구축 등을 통해 법질서 확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법 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추진

교통질서, 먹을거리 안전 등 지역 · 분야별 특성을 살린 민간 중심의 법질서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중점과제 발굴과 활동결과를 평가하여 우수 단체 · 개인을 포상하고 법질서 준수 시민의식을 글로벌 수준에 맞게 함양하겠습니다.

부정 부패가 발 붙이지 못하는 사회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의 부패 인식 지수는 OECD 30개국 중 20위권으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국가청렴도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입니다. 우리의 부패 문제와 낮은 국가청렴도로 인해 국가브랜드가 저평가되고 국가위상과 품격 제고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이 세계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앞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부패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대대적 척결이 필요합니다. 공공부문의 부정 · 부패를 척결하고 국가청렴도를 높여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국가 신인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체제 정비가 시급합니다.



공공부문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공직사회의 구조적 · 고질적 부패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공기업 ·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비리를 엄단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개선, 부정입학 근절, 학교운영 투명화, 교육청 기능개편 등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개혁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청렴성 제고에 있어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중요함을 고려하여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성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토착비리 척결 및 범죄수익 철저 환수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회계분석팀 등 전문수사팀을 신설하여 전국 지방 공무원 등에 의한 지역 토착 비리, 불법 비자금 조성 비리를 척결하며 범죄로 인한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겠습니다.

‘우먼 업 코리아’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성평등 지수 순위는 한국의 경제력이나 국가신인도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공직분야 중심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있지만, 고위직 여성 비율은 아직도 10%에 미달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년 증가하고 여성의 정보 · 과학기술 방면으로의 진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등 우리사회의 많은 변화 속에서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졌고, 성별 임금격차도 축소되었지만 소수의 일부 여성들이 약진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성의 경제 · 사회적 지위에는 커다란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조화를 이루고 가정 내에서도 부부가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여 가정에서부터 평등한 생활문화가 정착되고, 여성이 사회 곳곳에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편리한 여성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정의와 복지를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도시환경도 반드시 구현되어야 합니다.



국제성평등 지수 향상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제 성평등 지수를 향상시키고, 우리나라가 성평등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분야 국제협력 강화

개발도상국 여성을 위한 공적개발 원조(ODA)를 확대하고 국제적인 여성이슈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엔 여성발전기금 분담금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공공분야 여성대표성 확대 및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 발굴

민간 부문 선도를 위해 정치 · 행정 등 공공분야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중앙부처 여성정책 책임관제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중앙의 4급이상, 지자체 5급이상 여성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제고, 공공기관 기관장 및 여성 비상임 이사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의 여성관리자 육성을 독려하고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를 발굴 · 육성하겠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남녀평등한 생활문화 확산

가족의 가사분담 분위기를 확산하고 건전한 명절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양성평등 의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육과 가사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시스템 마련



아동발달 단계별로 맞벌이 가족의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자녀양육 문화 ·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폭력과 범죄 없는 도시 만들기

승강장, 지하주차장, 노후보안등 교체로 도시 조명을 개선하고 엘리베이터 주변의 채광을 확보하겠습니다. 퇴근길 안전을 위한 마을버스 진입로 확대, 여성전용콜택시 지원, CCTV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이 안심하는 주거환경 만들기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아파트 단지 및 주거단지 내 긴급 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공동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단지와 아동 · 여성 전문병원을 연계하고 안심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실내외 가족놀이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여성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시환경 만들기

건축 심의과정에 여성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여성 친화적 조경 설계기준을 도입하겠습니다. 임산부와 유아를 동반한 가족을 위한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여성 친화적 복합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가정의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결혼이 선택의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한 혼인연령의 상승, 이혼율의 상승,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한부모가족, 독신가족, 노인단독가족, 재혼가족, 다문화가족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며 가족의 기능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족의 증가, 장시간의 근로시간으로 인해 가족원간의 개별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웃과도 단절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 장애여성, 탈북여성, 일본군 피해자 등 소외계층의 여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과 취업,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가족형태 · 인종 · 외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바로잡아 가족이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

모범적으로 가족친화 문화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가족친화정도를 자가진단 할 수 있는 가족친화지수의 웹시스템 지속 운영을 통해 가족친화지수를 측정, 공포하겠습니다.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위기가족, 조손가족, 미혼모가족, 장애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따른 아이돌보미 사업을 전문화하고 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취약한 가정의 지원 강화

청소년 미혼모, 조손가족, 이혼가족 등 취약가정 특성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여 가족 해체를 방지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의 여성 인권 보호

이주여성, 탈북여성, 장애여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소외계층 여성의 인권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종합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 공약집은 2010년 6월 2일 제5회 동시지방선거의 주요공약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별 공약은 권역별로 별도 발행됩니다.

중앙공약집 발행일 2010년 5월 4일
권역별공약집 발행일 2010년 5월 13일